

정신대 자료집 9
1998.6.2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SAd.a.9

정신대 자료집 9

제5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1998. 6. 2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인권 자료실		
등록일	등록번호	자료번호

정신대 자료집 9

제5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1998. 6. 2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차 례

- ◎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일정표 · 5
- ◎ 사진으로 보는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 7
- ◎ 개회사: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 11
- ◎ 격려사: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13
- ◎ 각국발표 1
 - Lila Pilippina 캠페인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캠페인 방법과 계획 (필리핀) · 14
 - 리첼다 엑스트리마두라 (Richelda A. Extremadura / Lila Pilipina)
 - 여성 인권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필리핀) · 18
 - 수잔 마카부아그 (Susan Macabuag / Malaya Lolos)
 - 인도네시아 위안부들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인도네시아) · 21
 - 파울루스 마후렛 (Paulus R. Mahulette / 변호사)
 - 대만 위안부 배상요구운동 현황보고 (대만) · 23
 - 하벽진 (何碧珍 / Taiwan Women's Rescue Foundation)
 - 전쟁 희생자 중국 여성들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중국) — 강 건 (康健 / 변호사) · 25
 - 질의응답 · 28
- ◎ 각국발표 2 - 한국 발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성과 —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 29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 지은희 (정대협 기획위원장) · 31
 - 정대협 운동 - 생존자 복지활동의 현황과 과제 — 김신실 (정대협 피해자복지위원장) · 34
 -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과 과제 — 이미경 (국회의원 / 국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모임 대표) · 38
 - 질의응답 · 41
- ◎ 각국발표 3 - 일본 발표
 -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 김영희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 44
 - 아시아연대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스즈키 유우코 (여성전쟁인권학회) · 49

- 지금까지의운동의평가와앞으로의과제 — 니시노 루미코 (전쟁책임자료센터) · 54
- '여성의인권' 국제운동에서본 '위안부'운동의평가와행동제안 · 59
 - 마쯔이 야요리 (아시아여성자료센터)
- 질의응답 · 65
- ◎ 종합토론 · 67
- ◎ 결의문 · 69
- ◎ 기자회견 · 70
- ◎ 도쿄아시아연대회의보고집회 —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 74
- ◎ 도쿄아시아연대회의보고집회일정 · 76
- ◎ 참가자명단 · 77
- ◎ 후원해 주신분들 · 82
- ◎ 참가자소감 · 83
- ◎ 부록 - 정대협 활동일지 (97.1~98.6) · 84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일정

1. 주제 :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
2. 일시 : 1998년 4월 15일(수) ~ 17일(금) 2박 3일
3. 장소 : 한강호텔 (서울 광진구 광장동 188-2 ☎ 02-453-5131)
4. 참가 : 한국 86명, 일본 52명, 대만 2명, 필리핀 2명, 인도네시아 1명 총 143명

5. 회의 일정

[4월 15일(수)]

- 12:00 ▶ 수요일(제308차) 일본대사관 앞 사회 : 양미강 (정대협 총무)
 - 풍물 : 뭉치
 - 인사의 말씀 :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 각국 대표인사 :
 - * 일본 — 마쯔이 야요리, 야마구찌 아끼코
 - * 인도네시아 — 파울루스 마후렛 (Paulus R. Mahulette)
 - * 필리핀 — 수잔 마카부아그 (Susan Macabuag)
 - 성명서 낭독 : 한국염 (정대협 서기)
- 12:40 ▶ 점심식사(할머니와의 만남, 목호집) 진행 : 김신실 (정대협 피해자복지위원장)
- 16:00 ▶ 등록, 접수(호텔로비) 진행 : 정숙자 (정대협 재정위원장)
- 17:00 ▶ 개회식(세미나실) 사회 : 조미리 (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 개회인사 :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 축하말씀 :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과보고 : 양미강 (정대협 총무)
 - 광고 : 한국염 (정대협 서기)
 - ▶ 발제 사회 : 조미리 (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 리첼다 엑스트리마두라 (Richeida A. Extremadura / 필리핀 Lila Pilipina)
 - : Lila Pilipina 캠페인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캠페인 방법과 계획
 - 수잔 마카부아그 (Susan Macabuag / 필리핀 Malaya Lolos)
 - : 여성 인권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 파울루스 마후렛 (Paulus R. Mahulette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위안부들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 19:00 ▶ 환영만찬 (만찬장,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초청만찬)
 - 사회 :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 초청의 말씀 :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 인사의 말씀 :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격려사 : 오재식 (한국선명회 회장)
한영애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 참가자 소개
- 20:00~22:00 ▶ 아시아 문화의 밤(세미나실) 사회 : 임지영 (한국여성불교연합회)
- 합창 :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합창단
- 각국 문화 발표 :
 - 한국 : 샬리이춤 강혜숙 (충북 민우회)
 - 필리핀 : 민속춤 수잔 마카부아그 (Susan Macabuag / Malaya Lolos)
 - 인도네시아 : 민속춤 파울루스 마후렛 (Paulus R. Mahulette / 변호사)
 - 일본 : 합창

[4월 16일(목)]

- 7:30 ▶ 아침식사(식당)
- 9:00 ▶ 발제(세미나실) 사회 : 정진성 (정대협 진상규명위원장)
 - 하벽진 (대만 / TWRF) : 대만 위안부 배상요구운동 현황보고
 -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성과
 - 지은희 (정대협 기획위원장) :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과제
 - 김신실 (정대협 피해자복지위원장) : 정대협 운동 - 생존자 복지활동의 현황과 과제
 - 이미경 (국회의원 / 국회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모임 대표) :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과 과제
- 12:00 ▶ 점심식사(식당)
- 13:30 ▶ 발제(세미나실) 사회 : 다카하시 기쿠에
 - 김영희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보고
 - 스즈키 유우코 (여성전쟁인권학회) : 아시아연대운동의 성과와 과제
 - 니시노 루미코 (전쟁책임자료센터) : 지금까지의 운동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 마쯔이 야요리 (아시아여성자료센터) : '여성의 인권' 국제운동에서 본 '위안부'운동의 평가와 행동제안
- 16:00 ▶ 그룹토의(만찬장) 사회 : 정숙자 (정대협 재정위원장)
 - 영 어 권 <1>
 - 일 어 권 <1> <2> <3> <4>
 - 한국어권 <1> <2> <3>
- 18:30 ▶ 저녁식사 (식당, 한영애 국회의원 초청)
- 20:00~21:30 ▶ 분과별 발표 (세미나실, 몸짓으로 표현)

[4월 17일(금)]

- 7:30 ▶ 아침식사(식당)
- 9:00 ▶ 종합토론(세미나실) / 결의문 채택 사회 :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 11:30 ▶ 기자회견(세미나실) 각국 대표
 - ▶ 폐회사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 12:00 ▶ 점심식사(식당)

사진으로 보는 제5차 아시아 연대회의



종합토론 진행장면



각국 대표들의 기자회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를 마치며(참가자 단체사진)



발표를 들고 있는 참석자들



아시아 연대회의에 참가한 피해자 할머니들



발제를 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발제를 하는 일본측 대표



발제를 하는 일본대표들



발제를 하는 필리핀대표



발제를 하는 한국대표들



발제를 하는 한국대표들



아시아 문화의 밤-일본 참가자들의 합창



아시아 문화의 밤-필리핀 대표



분과 토의 발표장면



분과 토의 발표장면



아시아 문화의 밤 - 실풀이 춤(강혜숙)



아시아 문화의 밤 - 인도네시아



분과토의 발표장면



아시아 문화의 밤 - 한국불교여성연합회 합창단



분과토의 발표를 보고 즐거워 하는 모습



분과토의를 하는 모습

수요시위에 참가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들과 피해자 할머니들



개회사

윤정옥 공동대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5차 아시아 연대회의가 활기차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히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Paulus R. Mahulette 변호사께서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의 강 건(康健)변호사를 초청했습니다마는 못오신다는 소식이 왔고, 북조선도 초청했습니다마는 오늘까지 가부회답이 없습니다. 두 나라 대표가 참석못한데 대해서 복잡한 심정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1990년 6월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 정부측이 종군위안부에 일본군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해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했습니다. 단시일에 이 문제는 국제적인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1992년 제 1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본 연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짧은 시일에 우리가 단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명예와 존엄성이 깃뻛힌 인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종군위안부제도의 희생자가 국내외에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채 국내외에서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대협이 출발했을 때 이 문제가 최근과 같이 돈의 문제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못했습니다. 1992년 일본정부가 미마이킹(見舞金)을 주겠다고더니 1995년 일본폐전 50주년에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 돈은 여러 피해국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 사이에,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단체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피해자에게는 심한 동요 내지 판단의 착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하시모토 총리의 편지를 반환했습니다. 대만정부는 일본에서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대만정부 돈으로 선불했고, 한국정부는 국민기금을 반대하여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지불했습니다. 국민기금은 기금지불 대상자를 아시아에서 300명으로 잡고 1996년부터 지불할 계획이었으나 국민기금측 발표에 의하면 50명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은 피해자에게서 거절당한 것입니다.

가부장제 밑에서의 사람은 남성뿐이고 남성들이 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지옥 속에서 극치를 이룬 것이 제도적, 조직적 강간입니다. 오늘날 UN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이 제도가 전쟁범죄이고 가해국인 일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함으로써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범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기금과 같은 굴욕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50여년전에 저질러진 일본군 성폭행 문제가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남성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말할수 있는 범죄가 제대로 심판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2년 8개월 후면 21세기입니다. 남성이 끌고가는 역사는 자기가 크기 위해, 힘세지기 위해 상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연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구자체가 파괴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간성도 어

더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형편입니다.

이제는 정말 남성우월주의에 오염되지 않는 여성이 일어나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과 여성의 인권회복을 위해 가해국의 사죄와 배상을 더욱 조직적으로 요구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본의 이미 조직되어 있는 입법을 위한 단체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세계의 인권단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가부장제 역사 속에서 학문과 기술 등의 발전으로 인류와 자연이 혜택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생관을 바꾸어 인간들이 서로 돕고 자연과 조화되어 살지 않는다면 인간이 파국을 맞게 되고 하나밖에 없는 지구가 파멸을 맞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남성들의 힘겨루기 경쟁의 극치가 전쟁이고, 여성 차별의 극치가 조직적 성폭행입니다.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는 새역사의 정원(正員)이 될 여성답게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최대한 마무리짓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산과 들과 물과 그 안에 사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사는 평화의 새 역사를 열 수 있게 노력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필리핀, 한국대표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되돌아 보건대 일제하 우리민족이 겪은 치욕과 고통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에 지워지지 않고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일제하에서 여학교를 다녔습니다. 조그만 시골학교였지만 저보다 두 세살 많은 여성들이 기차에 끌려가는 것을 당시에는 몰랐지만 생생하게 기억하며, 남자들이 강제로 징용에 끌려갈 때 가족들이 우는 모습들도 생생합니다.

일제하에 강제로 끌려가 온갖 고통을 당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생역정은 우리민족의 비극을 나타내는 일로 국민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아픔과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사 저편에 묻혀있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여, 지금까지 국내외 여론을 선도해 오고 계신 윤정옥, 이효재, 김윤옥 선생님을 비롯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담대한 결단과 수고하심이 있었기에 이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그동안의 뒤늦었던 역사를 바로 잡고,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어느 특정 국가, 특정인만의 비극은 아닙니다. 지금도 무력분쟁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대규모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여성인권의 중대한 침해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저희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여성계 입장의 의견에 기반하여 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실 올해 3월에 열린 제42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서 저는 한국수석대표자 기조연설에서 일본측이 민간기금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충분치 못하므로 일본정부 차원의 성의있는 문제해결 조치를 취해 주어야 유린된 여성의 인권과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4월에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대표자가 일본정부의 진솔한 잘못의 인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국의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및 관련단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장관님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님들과 만난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올해로 다섯번째 개최되는 연대회의가 계속해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더욱 환기시킴으로써, 앞으로 여성과 무력분쟁,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인권유린에 관계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 본보기의 사례가 되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여성 인권 유린의 방지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할머니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축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Lila Pilippina 캠페인에 대한 평가보고서 및 캠페인 방법과 계획

리첼다엑스트리마두라

(Richelda A. Extremadura / 필리핀 Lila Pilippina)

I. 서론

1997년은 Lila Pilippina의 정신대 희생자들에게는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문제운동에 성과를 거둔 무척 활기넘친 한 해였다. 대내외적으로 정신대 희생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신대 희생자들은 그들 조직을 강화시키는 활동까지 계속해왔다. 대내적으로 여러 면의 단결을 꾀하는 동시에 위안부들 단체나 개인의 참여 또한 이끌어 주었다.

II. 본론

1.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배상을 요구하면서

지난 1997년 5월 16일 3시간동안 3명의 필리핀 위안부 생존자들은 동경 대법원에서 열린 필리핀 위안부들의 배상문제에 관련된 16차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인들에게 당한 성폭행과 위안부생활을 열거하였다. 68세의 Julia Porras는 70명 이상 참석한 법정에서 일본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Davao del Norte에서 일본 진영을 주둔시키던 곳에서 위안부생활을 8개월간 하면서 외웠던 것이다. Julia의 증언에 의하면, '아사다요, 아사히가 노보루' (그날 아침,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라는 이 노래를 일본군들이 매일 아침마다 불렀다 하였다.

70세 된 Cisteria Alcober는 간이호(여우굴)를 파는 작업을 강압적으로 하였고 자신이 판 그 간이호(여우굴)속에서 일본군들에 의해 밤마다 강간당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70세의 Rosario Nopueto는 일본군들에게 강간을 당한 후, 그리고 2차래에 걸친 대학살의 경험 뒤에 낳은 딸의 이름을 Milagrosa 즉 '기적'이라고 지은 연유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학살 때 그녀의 아버지 삼촌, 사촌 그리고 이웃들이 목베였고 그리고 그녀는 강간을 당했으며, 그 뒤 2번째 학살때에 일본인들을 접대하던 동료 위안부들의 목도 잘려나갔다고 증언하였다.

Lila Pilippina 또한 배상금 문제를 위한 재판을 위해 1997년 7, 8월에 일본인 변호사들과 함께 증거를 찾는 일을 하였으며 필리핀 위안부들이 억류되었던 곳을 문서화하는 일과 46명의 필리핀 원고들을 위해 일본 변호사들의 집중적인 인터뷰에 응하였다. 1997년 1월에 시작된 필리핀 Lila Pilippina Lolos와 지지자들은 마닐라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한 달에 두 번 정도의 시위 모임을 가져왔다. 어떠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쟁기간 동안 정신대의 고통을 서술하는 단막극을 무대에 올리거나 노래와 춤을 추었다. 전쟁동안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주장하면서 열정적인 연설을 하였다. 국내외 기자단들은 이 일을 취재하기 위해 모였으며 이 우리의 주장을 인터뷰했다.

7월 일본,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의 여러 지원단체로 형성된 연대회의가 시작되었다. 그 연대의 목적은 정신대 희생자과 그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상을 좀더 강하게 요구하고자 함이었다. 또한 1997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로 세계 여러 지도자들과 저명인사들이 작성한 호소문을 서명과 함께 보낼 계획도 세웠다.

Lila Pilippina와 필리핀,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정신대 협의회는 국제 노동기구 (ILO)가 1997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 열리는 제네바 총회에 연대 호소문을 전달하였다.

ILO 대표 이사인 Michel Hasenne에게 보내진 국제 호소문은 일본 정부의 배상과 정부차원의 사과에 대

한 정신대 생존자의 요구를 강하게 일본정부에게 촉구하는 특별한 결의문을 실었다. 그 호소문에 1997년 3월 ILO 전문위원회의 보고서가 첨부되었는데, 일본 군대의 정신대 여성에 대한 처우는 ILO에 규정된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리고 일년이 되지않아 일본 교과서에 정신대 여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일본이 전쟁중에 아시아 여성들을 이용한 위안부 제도 등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어떤 단체에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고자하여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는 이들과 투쟁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인들의 행위가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지른 죄를 왜곡하며 정신대 여성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부정하여, Lila Pilippina는, 교과서에 불충분하게 언급된 몇줄의 내용은 대만과 한국 여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다루었고 필리핀 여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Lila Pilippina는 또한 필리핀에서 일본 군대들이 자행했던 정신대 문제를 일본 정부차원에서 조사하기를 요구하였다. 이는 1941년에서 42년에 걸쳐 필리핀에 해군 대위로 3개월간 복무하며 3,000 명의 일본군을 지휘했던 야수시로 나카소네 전 총리의 발언에 맞서 나온 요구이다.

다음은 Lila Pilippina가 정신대 운동에 관련된 세계적인 대회에 참여했던 기록이다.

- 타이페이 IW 지원단체 모임 4월 20-24일
- 오키나와 전쟁 희생자에 관련된 겐조모임 7월 19-26일
- 위안부 로사를 추모하기 위한 동경 모임
- 정신적 충격에 관련된 심포지움과 포럼 10월 23-26일
- 정신대 관련 오사카 모임 9월 21일

2. 더 강력한 단체를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Lila Pilippina는 일본정부의 법적인 보상과 배상을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적으

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관련하여 국내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였다. Lila Pilippina는 피켓, 집회, 행진같은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여 국내적인 문제에 그들을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Gabriela, Bayan 그리고 Karapatan 같은 다른 조직과 결속력을 다졌다.

- 기쁨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집회 2월 7일
- 국제 여성의 날 행진 3월 8일
- 노동절 집회 5월 1일
- Hacienda Looc에서 농민들과의 단합대회 5월 28-30일
- Peso 가치 절하 반대 시위
- 현 시국에 대한 시위 7월 28일
- 빈곤에 대한 시위 10월 21-24일
- 여성 억류자들에게 대한 농성 12월 5일
- 인권옹호를 위한 조치이행 12월 10일

이와같은 활동에 참여한 뒤로 Lila Pilippina 회원들은 국가문제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대부분 빈민층 출신인 정신대 여성들은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계층 여성들과도 고민을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

더욱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어떻게 그들의 상황을 말했는가이다. 특히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을 강력하게 증언했으며, 한편 다른 문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협조해왔다.

이러한 점에서 Lila Pilippina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더 많은 감사와 이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더 폭넓은 지지가 형성되었다.

이제 희생자들은 과거를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폭넓게 접하게 되어,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명료하고 자신감있게 말하였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투쟁을 이끌어 가는 힘과 용기가 되었다.

이것과 별도로, Lila Pilippina는 또한 정신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각 지역에서 단합시켜 조직을 형성하는 일을 떠맡았다. 여러 실무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기적인 모임과 방문을 하였으며 이

런 것은 다른 공동체의 여성들과 단체에게 위안부들의 문제를 알리게하는 수단이 되었다.

최근에는 Metro Manila에는 3개의 단체가 있으며 Cebu, Bohol, Iloilo, Bacolod, Davao에 2개의 단체가 있다. Metro Manila의 세 지역에서 매월 모임을 가지며, 이 모임에서 위안부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교육 과정과 다양한 조직 활동에 대해 논의를 한다.

Lila Pilippina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주고 받으며 결속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회의들을 주관해왔다.

*** 월 총회**

매달 한번씩 정신대 모임을 가지고 캠페인에 대한 최근 현안을 논의한다. 교육 세미나를 가지며 다른 나라에서 진행중인 위안부 여성들의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이러한 모임 가운데 정신대 희생자들에게 행해지는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된다. 단체 무용이나 각자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모임같은 사회적 활동을 가진다.

*** 정신대 협의회 모임**

정신대 협의회 모임을 일주일에 한번씩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모임은 Lila 회원들과 지역 대표자들 그리고 실무진들로 이루어졌다.

이 협의회는 시위나 다른 연맹과의 관련사항, 그리고 다른 활동 계획과 최신 정보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리 기능 이상의 역할을 한다.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하는등의 일도 행해진다. 여기 정신대 희생자들은 실무진들과 편지를 작성하여 국제적인 지지자들에게 보낸다.

의료와 복지 전달체제도 정신대 희생자들이 참여한 Lila Pilippina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은 회원들에게 더욱 의미깊은 조직의 일부로서 소속감과 관계성을 만들었다.

III. 결론

지난 한해동안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일본 정부에 요구를 더 강하게 할 수 있었다. 조직내부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지지세력을 연합한 것이 주요 추진력이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의 국민기금에 관련된 정책은 정신대 희생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금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기금이 그들의 요구에 대한 올바른 배상이 되지않는다고 것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 이유로 기금에 관심을 가지게 된 26명의 정신대 희생자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하였다.

국민기금으로 인해 정신대 희생자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다른 결과는 그 기금을 받은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과 단결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조직을 위안부들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올해 활동은 좀 더 단결된 조직이 어떻게 주요 문제를 대응하여 다른 문제까지 다룰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었다.

계속되는 지지와 일본 정부로부터의 법적 배상에 대한 운동,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경험을 폭로, 군국주의 진상규명, 이밖에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하여 국내외적인 지지를 확대하여 자신들의 명분을 주장하는 정도까지 발전하였다.

그들 대부분에게 있어 이러한 활동은 인생의 빛줄기와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충】

이러한 캠페인은 대중과 방송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어 국민기금에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하자면 2차 대전동안 일본군이 자행한 강간과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민기금이 적합한지 여부와 이 기금

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시모토 일본 총리의 편지를 이 정신대 희생자들이 거부하며 국민기금을 받아들인 후에 국가적인 배상을 주장한 것이다. Lila Pilippna Lolos는 일본이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것과 정부차원의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국민기금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국민기금은 정신대 희생자들의 이러한 운동에 맞서서 적대적이고 투쟁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던 정신대 희생자들을 초대하여 만일 이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일본총리의 사과문을 거부하며 의료복지 사업지원을 거절한다면 이 희생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2백만엔의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국민기금 대표자들은 앞으로 Lila Pilippina Lolos가 국민기금을 이용한다면, 총리의 사과문과 더불어 의료 복지사업을 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는다면 2백만엔의 돈이 더 이상 지불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런 적대적인 협박을 받고, 처음에는 5명의 희생자들이 개인적인 재정상태 때문에 고민했지만 지금은 총리의 사과문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Lila Pilippina측은 국민기금을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도 국민기금에 관한 희생자 개인의 결정은 존중해 주기로 했다. Lila Pilippina 또한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국민기금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정신대 희생자들에 있어서는 자문의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 이런 자문의 역할이 국민기금을 받은 희생자 개인에게 실제로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해 온 캠페인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정신대 여성들이 캠페인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면에서 국민기금을 받는 것을 용기있게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 때문에 Lila Pilippina는 실제 궁핍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단결된 마음으로 국민기금이 제시하는 돈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배상을 지지

할 수 있었다.

동시에 국민기금을 받았던 많은 정신대 희생자 또한 Lila Pilippina가 일본정부로부터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위나 총회 그리고 다른 필리핀 정신대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민기금이 절대로 일본정부차원의 배상이 아니며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이 아직 행해지지 않고 보고 있다. Lila Pilippina는 필리핀 정신대 희생자들간의 결속력을 지지하며 (국민기금을 받던 혹은 받지 않았던 간에) 배상을 요구한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여성 인권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의 보고

수잔 마카부아그
(Susan Macabuag / 필리핀 Malaya Lolo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SCENT/Malaya Lolos를 대신하여 2차 세계대전중에 일본제국이 여성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고 여성인권과 정의를 구현하고자 결성된 5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제대회에서 유엔 법무관인 메리 로빈슨 여사께서 "전쟁 기간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다양한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강간과 다른 여러 형태의 성폭력이 세계 여러곳에서 무장화된 전쟁의 도구가 되어 증가추세로 이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말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여성인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국제기구를 모든 국가가 무조건 비준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인권협약, 특히 여성권리에 관련되어서는 모든 유보사항을 각 정부에서 철회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각 민간단체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쟁기간에 벌어진 폭력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 50년동안 노력하여 그 전쟁기간 동안 아시아 여성들이 성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알림으로서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ASCENT/Malaya Lolos]

필리핀에서 첫 필리핀 정신대 여성들에 대해 알려지면서 6년동안 Malaya Lolos는 일본정부로부터 정부차원 배상과 개인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왔습니다. 또한 일본의 국민기금이 제시하는 돈은 원래 목적을 왜곡시킨다는 판단하에 거부해왔습니다.

Malaya Lolos는 일본정부에 의해 성노예로 폭행당한 희생자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여성 인권단체(Asia Center for Women's Human Right)의 프로그램이며 일본의 국민기금(AWF)을 받

대하는 위안부 여성들의 반대시위 일환으로 조직되었습니다. Malaya Lolos는 모두 노령의 102명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Malaya Lolos의 조직과 목적]

- (1) 전쟁이나 무장된 상황에서 생기는 여성들의 희생을 주안점으로 하여 여성의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 (2) 희생자의 인권과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내외적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 (3) 일본의 국민기금을 반대하고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배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 (4) 일본으로 하여금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 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 (5) 성적노예화, 강요된 임신, 단체강간, 화학전쟁의 영향, 군대 성적 노예화, 대량학살, 인신매매, 인체실험, 불구화로 만드는 등의 전쟁범죄를 포함하여 전쟁 중 강간의 개념을 재 정립하기 위하여
- (6) 국내외로 정신대 여성들과 그 생존자들의 결속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Malaya Lolos에 의해 문서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알려진 사례는 필리핀 Pampanga의 Mapanique에 있었던 집단 성폭력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1944년 11월 23일 이른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일본 군대는 그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집과 소유지를 모두 약탈했으며, 처자들이 보는 앞에서 남자들을 고문하고 불구로 만들거나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진영으로 쓰이던 집으로 끌려가서 두명 이상의 군인에 의해 강간을 당하였고, 현재 그 집단강간의 희생자들이 90명

가량 남아있습니다. 오늘날도 그 집은 그 자리에 보존되어 '붉은 집(Bahayna Pula)'라고 불리우며 끔찍한 과거의 말없는 목격자로 남아 있습니다.

[Malaya Lolos의 업적]

(1) 오늘날까지 Malaya Lolos의 어느 누구도 일본의 국민기금의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받아들이며 법적인 배상을 제시할 때까지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믿으며, 일본의 국민기금이 원래 목적을 왜곡시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2) ASCENT는 Frits Kalshoven 교수를 국제인권 법률의 전문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Kalshoven는 국제인권법률에 대한 명예교수로서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졌던 전쟁범죄 조사를 위해 파견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위원장으로 1992년과 1993년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전문위원으로 90년 전에 제정된 국제법, 즉 헤이그 법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에 대해 희생자 각자가 일본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Kalshoven 교수는 일본법정에서 연설한 첫 법률고문이었습니다.

(3) 재판진행

Malaya Lolos 중 Gertrude Balisalisa는 동경 지원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전에 출석하였습니다. Malaya Lolos를 지원하는 일본단체인 한 일본 연합통신망이 재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본권리를 강화시키며 옹호하는 중요한 기구가 법률단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Malaya Lolos는 Pampanga의 Mapanique에서 일어난 단체 강간사건의 희생자들을 대신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을 추진 중입니다. 변호사 단체에서 희생자들의 증언을 기록해두는 한편 일본과 필리핀의 역사가와 연구원들은 법적인 면과 역사적인 면에서 필요한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하고자 광범위한 연구를 행하고 있습니다.

(4) 국내의 활동상황

Malaya Lolos는 정기총회를 여는 한편 특별한 행사

를 위한 기념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a) 11월23일 Mapanique사건을 국가적인 날로 정하고 b) 3월 8일을 세계여성의날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탄절 같은 특별한 행사를 위한 단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하여 방송을 동원합니다. Malaya Lolos는 학교와 다른 여성 NGO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강간당한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희생자들에게 여러 지원사업을 합니다.

(5) 국외의 활동상황

Malaya Lolos은 다른 단체의 활동도 지원하며 협력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Peace Boat, 그리고 타이페이 부녀구원사업기금회에 의해 조직된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Malaya Lolos는 전쟁상황에서 여성에게 행해진 폭력을 좀 더 잘 파악하고 알기위해 Pampanga의 Mapanique에 온 국제위원회를 대접하였습니다. Malaya Lolos의 ASCENT는 1997년 말경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전쟁과 무장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즉 학자, 과학자, 연구자들, 학술가들, 여성운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학회의 진행과 결론은 희생자 여성들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무한한 비극과 유례없는 인권탄압의 성격과 그 개인의 인생에 미친 엄청난 파멸과 보상이나 정의실현이 거부된 상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에 상당한 공헌을 하게 될것입니다. 올해 인권위원회에 그녀의 상세한 보고서가 제출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평가와 계획]

필리핀 국민들에게 몇 년전 위안부 문제가 제시된 이후, 상당한 진척이 있었습니다.

—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진술하는데 용기를 얻기까지 여러모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인정은 희생자들에게 자신감과 자존심을 주었

습니다.

— 필리핀 위안부 여성들은 국내외적으로 단체를 형성하여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 이 문제들은 유엔의 관심을 끌어왔으며 정부에 의해서 용서된 그러한 폭력행위에 대해 특히 관심이 집중되어 인권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토의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원고들의 법원 소송건은 판결을 위한 소송건으로 접수되어 인정받았습니다.

[문제점]

위안부 여성에 대한 문제가 오랜기간 진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쟁책임을 회피하고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내 보수당측은 그들의 교과서에 '위안부'에 대한 언급을 없애버리고자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지단체인 ASCENT가 필리핀 여성 위안부들에 대해 배상하는 일을 맡아왔는데 꾸준한 노력과 열성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면이나 인력의 부족이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간의 의견과 방법의 차이 또한 주요한 정치단체로서 그들 역할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희생자들은 점차 병들고 쇠약해져서 의료지원을 필요로 하게되고 많은 수가 사망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희생자들은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계획]

(1) ASCENT/ Malaya Lolos는 계속하여 일본정부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할 것이며 정부차원의 사회와 직접적인 법적 배상을 통한 정의구현을 이룰 것입니다.

(2) 일본 국민기금을 반대하는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3) 국내 희생자들과의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희생자들과 결속을 위한 행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4) ASCENT/ Malaya Lolos는 필리핀 Pampanga의 Mapanique에서 벌어진 대량학살의 희생자들을 위한 소송을 추진할 것입니다.

(5) 여성인권을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희생자들과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위안부들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파울루스 마후렛
(Paulus R. Mahulette / 인도네시아 변호사)

1. 인도네시아에서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마지막 상황

이번 포럼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일본군들의 만행에서 비롯된 결과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도네시아 여성들을 지난 전쟁동안 잔인하게 다루었고 그 결과가 현재 어떠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대부분이 60대 중반입니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 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왔으며 고생을 해왔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그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과연 그분들의 고생을 무시하고 잊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책임을 져야할까요?

인도네시아의 위안부에 대한 변론은 199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리 뚜렷한 발전이 없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 (1) 희생자들의 수, 주소, 처리방안에 대한 자료수집
- (2) 설문조사
- (3) 일부 희생자들과 개인면담

위안부들을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이 문제에 모으게 되었습니다. 1995년 마침내 무라야마 내각은 위안부 여성들을 돕기 위하여 국민기금을 조직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기금을 조직한 것은 계속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일본정부가 '책임회피'를 하려함으로 지적된 것입니다. 국민기금을 거부하는 이유 또한 약속된 10억엔이 모금되기는커녕 겨우 4억 1천 9백만엔만이 모금된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기금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일본정부의 공식사죄가 아닌 단지 위안부 각자에게 2백만엔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국민기금은 또 다른 2개

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일본 군대에 의해 성노예가 되거나 집단 성폭행을 당한 희생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자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 여성들의 위치를 증진시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금 프로그램의 기금은 일본 민간인들에 의해 모아졌으며,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출처는 일본정부 예산에서 나온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위안부 여성들이 있는 나라에 주어질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일본정부가 돈을 주게끔 각나라 정부가 촉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위안부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일본정부가 1997년 3월 26일 MOU협정을 체결한것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인도네시아에 10년동안 38억엔을 줄 것이며 그 돈은 2차 세계대전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위안부 희생자에게 갈 돈은 아니었습니다.

국민기금이나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돈이 위안부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오히려 우리정부가 그 돈이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일종의 배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MOU협정을 체결한 것은 바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결을 의미한다고 정부측은 설명하였습니다. 또 위안부가 편안하게 지내면서 치료받을 요양소로 돈을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정부는 결코 인도네시아 위안부 여성을 위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기로는,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배상금은 커녕 사과조차도 받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더욱 회의적인 사실은 국민기금만이 사죄에서부

터 배상까지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위안부 피해여성을 위한 진보된 노력

MOU협정을 체결한 뒤 16명개 NGO단체가 인도네시아에 있었고(그들은 주로 자카르타에 거주하였으며) 계속하여 위안부 여성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일본정부를 고발할 것입니다.

위안부들의 경우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인권가치의 측면에 있어서 위안부들의 문제는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규정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엔측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를 특별보고관으로 선정하여 희생자들의 나라와 특히 일본내에서의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에 대해 확신하는 이유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위안부 희생자들을 지지하는 법적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일본 법정은 주요 일본 전쟁 지도자들이 다른 나라의 법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민간인과 비전투원 그리고 죄수를 다루는 문제에 대해 법이나 관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면서, 동경 법정은 판결내리기를 1929년 인권에 대한 제네바 협정은 관습적인 국제법으로 전쟁기간동안 일본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인권은 실질적으로나 절차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국제법정의 위상에 따르자면 전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자행된 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인권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언급이 주안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개인은 Nuremberg와 동경재판에서 있었던 국제법 위반에 대해 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개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고 처벌을 하는 과정에서 Nuremberg법정은 '국제법에 대한 범죄는 인간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 추상적인 개체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정해진 법에 의하여 개개인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여성에 대한 성노예화는 50년 훨씬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만,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 그들이 배상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1960년대에 유엔 총회는 책임을 지우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시기는 없으며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인권에 대한 반역행위를 한 사람을 벌주는데 있어서 제한된 기간이 없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약 위안부에 대한 문제를 인권에 대한 반역행위로 볼 수 있다면, 일본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데 '기소유예가 정해진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나라의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개념은 정부가 국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그 나라 관리에 대해서 책임을 국제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군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말하자면 (2차 대전 전에 국제법정에서 정해진 소송건에 따라서) 그들은 '의무의 범위 밖에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실 현 일본정부는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을 피하는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계승의 국제적인 원칙에 따르자면 일반적으로 이전 정부가 다음 정부에게 어떠한 책임과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Jakarta 법률 자문위원회, Yogyakarta 법률 자문위원회 그리고 16개의 NGO단체들은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변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설문조사나 개인 면담, 그리고 자료수집 외에 소제지 파악 등의 활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번 회의의 참석자들이 우리 정부에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여 우리를 지원해주시고, 정부가 이번 문제에 대해 정책을 바꾸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기를 불러 일으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 정부의 출현과 함께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으리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대만 위안부 배상요구 운동 현황보고

하벽진(TWRF / 대만 부녀구원기금회)

1996년 2월 일본정부가 연합국 인권위원회의 특별 보고 건의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는 매우 강력하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입장을 천명한다.

1. 대만 국적 위안부 피해자 및 그 후원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며 일본정부가 민간모금으로 보상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
2. 일본정부는 반드시 피해자에 대하여 개별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금을 일차로 지불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공정하고 공평한 입장에서 본 피해사건을 해결하여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된다.
4. 일본정부는 반드시 위안부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 외 1996년 4월 우리나라 입법위원회에서는 148명(90%)이 서명을 발표하여 일본 수상에게 유엔 보고 건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시종 소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년 12월 입법위원회에서는 150명(92%)이 재차 일본 수상 및 일본 참의원, 중의원 양 의회에 연대서명을 보내어 일본정부가 새로 법을 제정하여 위안부 문제를 명확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위에서 제출한 4가지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으며 위의 입장을 강력히 공개 천명한 외에 우리나라 외교부(外交部)에서는 내정부(內政部)와 협력하여 대만 국적 위안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돌보아주는 운동을 계속 추진해 왔다.

1997년 1월부터 당시 등록된 42명의 피해자들의 생활보상비를 매월 대만화페 1만 5천원(미화 \$540, 엔화 60,000엔)으로 높여주었으며 모든 의료비용을

부담해 왔다. 그리고 연로하신 피해자들이 생계가 보장되도록 하여 일본정부에 계속 항의를 제출하여 그들이 인생의 최종염원을 이루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시종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방자하게 암암리에 조직을 구성하여 그 죄악을 덮어 감추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기금은 1997년 5월에 대만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대한 "돈벌이 사기다"라는 광고를 하였다. 이러한 추잡하고 오만불손하며 큰소리치며 부끄러운줄 모르고 대만 국민의 민심과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불만을 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대만정부, 민간단체 및 언론매체를 자극하여 연로하신 피해자 분들을 지지하여 피해 배상요구를 끝까지 할 것을 결심하게 하였다. 동년 5월 왕청봉(王淸峰)변호사의 고군분투 결과 각 계층의 다함없는 협조를 얻게 되었으며 또한 위안부 공익광고를 제작, 각 언론매체에 적극 발송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동년 8월 대북시(臺北市) 부녀구원기금회(TWRF)에서는 유명한 역사학자이며 사회평론가이신 이오(李敖)선생의 큰지지 속에 대만 역사상 전례없는 민간 모금운동을 전개, 위안부 노인들을 위한 일인당 대만 돈 50만원(200만엔)의 사회기금을 성공적으로 모금하였다.

동년 12월 대만정부도 대만 돈 50만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불하기로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더더욱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게 하였으며 배상사죄토록 하려는 의지를 더욱 굳게 하였다.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노인들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분 한분은 잔혹한 전쟁과 무정한 참화속에서 무수히 불가항력의 "성폭행"을 당하였

으며 요행으로 살아남은 비참한 생존자들은 오만방자하고 추악하며 시야가 편협한 일본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2월말, 국민기금은 또다시 대만의 언론에 광고를 내었으나 대만사회에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간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고통을 덜어주며 서로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였으며 참혹한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일본정부 앞에 내놓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본정부를 지켜보기로 하였다.

민간 지지단체로서 우리들은 피해자들이 소극적인 태도로부터 적극적이고 굳은 태도로 바꾸고 있는 데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위안을 느꼈으며 동시에 크나큰 책임감도 느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건을 저버리지 않고 효과적으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가 하는 것은 현재 우리들이 심사숙고 해야 할 과제이다. 뿐만아니라 아시아의 모든 피해국 및 일본의 지지단체들은 더욱 더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 함께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것이 필요한 국제적 사업이다.

4월 말 우리들은 국회 방문단을 제조직하여 일본을 방문, 일본 변호사들과 입법을 합동토론하여 일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현재 대만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기록영화가 곧 촬영될 예정이며 또한 책자도 출판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각 계층의 지지와 고무 그리고 우리들의 변함없는 신념에 의한 것이며 일본정부는 반드시 이 역사적 죄과에 대하여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오늘날 일본정부는 이러한 죄과를 직시하지 않고 자손만대에 누를 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를 이어 대가를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를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전쟁 희생자 중국 여성들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강 건(중국 Ahongyuan 법률사무소 / 변호사)

1. 중국 여성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개요

세계 2차대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여 일본군에 의해 Mengxian현과 Shanxi등에서 그 지역 여성들을 잔혹하게 겁탈한 사실을 같이 일하는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해보았다. 그 조사는 여성 희생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알아보는 것이었으며 일본군대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강제 구류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을 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한 고장에서 50명의 여자들이 일본 군대에 의해 위안소로 끌려갔으며 그중 20명이 아직 생존해 있다고 전했다. 이 중국여성들의 대부분은 납치되었을 당시 대부분이 15세에서 18세이며 20대도 몇 명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당시 13세였던 Qiaolian이 가장 어린 나이로 끌려간 소녀였다. 희생자 대부분이 미혼이었으며, 그들 중 몇 명은 미성년의 소녀였고 임신한 여자들도 있었다. 여성 희생자들 대부분은 농촌출신이었으며 집에 있다가 무장한 일본군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던 것이었다. 짧게는 20일정도, 길게는 반년을 강제 감금되었다. 그렇게 감금된 상태에서 일본군들에게 여러 차례 아니 수십차례를 강간당했다. 심지어는 어떤 여성들은 은밀한 곳에 이상한 물질을 집어넣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당한 결과 끊임없이 붓고 피를 흘렸으며 그런 상황에도 매일 강간 당해야했다. 잠시라도 방심하게 되면 핵대나 총으로 두들겨 맞으며 상처를 입은 것이 아직도 확인하게 보였다.

납치당한 일본 여성들은 Mengxian에 일본군 진영에 각각 감금되었고, 그런 장소는 동굴이나 토치카같은 군주둔지였다. 鼎로는 민간인 집이나 동굴같은 곳이 일본군 주둔후 위안소로 변형되었다. 그 위안소는

입구에 경비가 서있었으며 화장실 갈 때조차도 감시받으면서 개인의 자유는 조금도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끼니는 옥수수죽으로 하루에 한 두끼만을 공급받을 뿐이었다. 심지어 그들 중 몇 명은 일본군인들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옷조차 입지 못하였다.

이 여성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짓밟힐대로 이용당하여 더 이상 쓸모없게 되면 희생자 가족들은 희생자들의 석방을 위해 수백 은전을 몸값으로 지불한 뒤 데려가게끔 요구당했다. 수백은전은 그런 상황의 평민들에게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으로 그들은 집이나 땅 그리고 가족을 팔거나 빚까지 져야했다. 하지만 이렇게 석방된 희생자들은 너무나 학대를 심하게 당했기에 걸을 수도 없었으며 심지어 앉지도 못하였다. 그래서 들것에 실려서 가족들이 데려와야 했었다. 일단 그 희생자들이 돌아온 뒤에도 가족들은 다시 그들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백방으로 돈을 꾸어야 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었고 불치의 병을 지니고 살아야했다. 그리하여 어떤 희생자들은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노년이 되기까지 불행하고 황량한 삶을 살아야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받아서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끼쳐진 충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

현장 조사를 할 당시,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일본군들에게 당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지역 사람들마저 일본군들이 자행한 방화, 살인, 노략질같은 범죄를 상기하면서 똑같이 분노하였다.

Hainan 지역의 Fu Heji씨에 의해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위안소'는 일본군들이 중국 Hainan 지역을 침략

한 1939년 4월경 세워졌다고 했다. 일본군들의 '위안소'는 1941이후로 점차 널리 확산되기 시작되었다. 그 즈음하여 그들은 시골, 도시 곳곳 일본군에 점령된 곳이면 어디든지 만들어졌다. 60개가 넘는 위안소 수가 확인되었다. Hainan 섬의 중심도시와 16개의 지방도시 외에 Yaxian 과 Changjiang과 Basuo 그리고 Nada같은 곳의 '위안소'의 '위안부'의 숫자는 1300명이 넘게 추산된다. 따라서 이는 일본군이 Hainan섬에서 납치해간 여자들의 숫자가 10,000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들 중 일부는 강제노역의 명목으로 집에서 그대로 끌려갔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이 무자비하게 집에서 그냥 끌어내간 것이었다. 또 교묘하게 간호병의 명목으로 피어내서 데려온 여자들도 있었다. 이 여성들의 일부는 강간당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일부는 강간당한 뒤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대로 살해되었다. 심지어 계속된 성폭행으로 얻은 성병의 감염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생매장당한 여자들도 있었다.

Shanghai Normal 대학의 Su Zhiliang교수는 이런 문제를 조사한 뒤에 일본군의 정신대 제도에 의해 중국인 여성들이 20만명 넘게 희생되었으리라 믿게 되었다.

현재 Mengxian 현이나 Shanxi지역의 현존하는 희생자들은 간키야마 히로시 변호사 그리고 오노데라 토시다가 변호사, 우모리 노리코 변호사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일임하여 1995년 일본 법정에 전쟁 희생자로서 배상금을 받고자 문서를 접수시켰다. 그리고 이 건은 지금 처리중에 있으며, 관련된 중국 여성피해자들과 그 관계인들은 일본법정에 참석하여, 기대를 갖고 사건처리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2. 가해국가로서 일본은 침략적인 전쟁중에 끼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져야한다.

전쟁이란 범죄는 국제 범죄 가운데 가장 잔인한 것으로 그 책임이 관련된 책임자나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민족 전체에게 지워지는 전쟁범죄의

개념으로 현 국제법에 다루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침략적인 전쟁으로 그 책임은 전쟁을 저지른 개인에게도 지워져야한다.

2차 세계대전후 Nuremberg 국제 군사 법조항에 따르면 전쟁 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평화를 파괴한 범죄 (2) 전쟁 범죄 (3) 인류를 반역한 범죄 또는 '전쟁 전후로 살인, 학살, 노예화, 국외 이송, 그리고 민간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다룬 행위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앞서 말한 범죄 중 어느 것을 범하기이전 공모하거나 계획한 것을 수립하거나 실행하는데 참여한 지도자, 조직원들 혹은 선동자나 공범자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라 하였다.

2차세계대전 중에 중국에 가한 침략적 전쟁을 획책하여 저지른 것으로 일본의 위치는 침략국으로 세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몇 명의 전범들은 전 소련연방의 Khabarov에서, 중국의 쉐양과 타이유안이나 극동지역의 국제 군대 사령관같은 곳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군대의 침략전쟁 기간 동안 정신대를 조직한 문제는 완전하게 감추어져 있고 그러므로 부합되는 재판이나 응당 치뤄져야할 법적 조치를 피해왔다.

증거자료상 군대 사기를 진작시켜 침략야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군대내에 '위안소'를 설치할 것을 승인했었다. 이런 목적으로 일본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뿐만아니라 동남 아시아 여러국가에서 '위안부'들을 탐색했다. 특히 중국 여성들은 납치되거나 속아서 유인된 것으로 자신의 자유의지와는 전혀 무관하였다. 중국여성들에게 만행을 저지른 일본 군대는 일본 정부의 사주로 중국을 공격하였으며, 일본 정부에 의해서 위안소마저 승인받아 세웠다. 그러므로 일본 정부는 중국여성들이 일본군에 의해 당한 고통을 보상해야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3. 전쟁 배상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를 고발한 중국 여성 희생자들의 고소는 출소 기한법을 넘어서지 않는다.

유엔 총회는 1946년 12월 11일에 결정된 안 95조

1항에서 만장일치로 Nuremberg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e 헌장에 따라 설립된 국제법 원칙을 승인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1968년 11월 유엔은 '인권을 유린한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법을 다시 한번 채택하였다. 일본정부를 상대로 전쟁 희생자에 대한 배상 소송은 일본정부가 이끌어가지 못한 전쟁 책임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전쟁 범죄는 이러한 전쟁 책임 즉 '인권을 유린한 범죄' 같은 책임을 가져오며 출소기한법에 의해 제지받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여성 희생자들은 어느 때라도 배상금에 대해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기까지 배상금과 더불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권리를 가지고 있다.

4. 중국여성 희생자들에 의해 일본에 제기된 조치는 중국 일본 공동 성명서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1972년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외교관계를 재개하였고 일본 중국간의 공동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정부에서 더이상 전쟁 배상금 문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런 성명서는 개인적인 희생자 즉 정부간의 배상차원이 아닌 문제같은 것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과 정부는 구별된 개체인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결코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로부터 전쟁 배상금을 주장할 권리까지 포기하는 국제 협약이나 협의서 혹은 조약서를 승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일본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법정 조치를 취하려는 중국 여성 희생자들의 권리는 계속 존재한다.

5. 소송 진행에 있어서 일본 법정에 제시하는 의견

1995년 일본 법정이 중국여성 희생자들로부터 소송을 접수한지 2년이 되었지만 언제 그 소송이 법정에 올려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중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한 교과서 개편에 대한 어느 학자의 소송건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한 방송매체에서 전한 바가 있다. 같은 방법으로 중국 여성들에 대한 소송도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나이많은 희생자들은 살아 생전에는 정신적 충격을 달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희생자들의 나이로 인해 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 불편함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일본 법정은 소송 처리 절차를 더 빠르게 처리할 것이며, 3년이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2) 한 건에 대한 판결은 다른 희생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도록 해야한다. 만일 같은 경우임 이 판명된다면 다른 희생자들도 같은 소송을 각자가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위와 같은 제안을 내가 하는 것은 이런 소송의 특수성에 기초를 둔 것이며 대표자들의 승인을 얻기를 바랄 뿐이다. 또한 입법적인 형태로 일본정부에 의해 승인받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일본 정부는 일본정부가 일으킨 침략전쟁에 의해 중국 여성 뿐 만아니라 중국 국민 전체에 가한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보상과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는 일본정부가 자신의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대한 진지한 회개로 여겨질 것이며, 나아가 역사적 비극의 재발을 피하기 위함이다. 여기 중국 격언이 있다. '공명정대함이 무한한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일본정부로부터 받아낼 전쟁 배상을 위한 중국 여성 피해자들의 소송이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각 대표자들로부터 승인받을 것임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4월 15일 오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발제에 대한 질의, 응답

▶ **질문** : 인도네시아 정부가 MOU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보상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였는가? 위안부에 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는가?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또 MOU 조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다. 또 필리핀의 경우는 정부의 태도가 어떤지 알고 싶다.

⇒ **답변** : 현재 필리핀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국민기금이 필리핀 사법부에 대표를 보냈고, 필리핀 대표가 기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주었다. 정부기관이 아닌, 정부의 권한을 받은 사법기관이 위임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우리 단체에서는 정부에게 쿠마라스와미의 특별보고를 채택하도록 로비를 했으나 필리핀 국회가 이 보고를 채택하는데 실패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아 보상금의 목적을 노인여성 전반으로 확대해석하였다. 그래서 정신대 희생자만이 아닌, 노인여성을 위한 주거를 위해 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노인여성의 주거를 위해 쓴 바도 없다. 이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잘모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MOU 조약을 체결하면서, 보상금을 피해자를 위해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우리가 할 일은 피해자들에게 이 보상금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제법을 잘 알아야 일본정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질문** : 인도네시아 경우, 이미 신고된 피해자 수는 얼마인가? 필리핀의 경우 관련단체와 할머니와의 관계는 어떤지? 리라 필리피나(Lila Filipina) 경우 피해자들이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

부에 대한 배상요구를 계속하고 하는데, 할머니와의 대화 창구는 어떤식으로 갖고 있는가?

⇒ **답변** : 인도네시아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는 387명이다. 이 수자는 '족자'라는 법률사무소의 통계수치로 자카르타 인근지역에서 확인된 것이다. 또 다른 정보에 의하면, 일본군이 제공한 정보는 380명이다. 우리는 이중 10명과 심층적인 면담을 하고 있으며, 15명의 조코 자카르타에서 온 사람들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의 리라 필리피나는 피해자와 활동가들간의 편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은 피해자들도 존경하고 있다. 또 그들도 배상을 위해 우리와 같이 호응하고 있으며 집회와 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중 일본에서 유학온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 자원봉사자들도 활동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다. 기금을 받고 계속 활동하는 사람, 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기금을 받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 등이다. 이들은 모두 시위에 참석하고 있다. 현재 26명의 피해자들이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았다.

필리핀 말라야 로라스(Malaya Loras)의 회원은 102명으로 아직까지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여성들, 사회복지학과 대학생들과 같이 연대하고 있다. 미리엄 여대생들은 2차 세계대전시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유를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할머니들과의 정기적 모임과 교육모임 등을 열고 있다. 할머니들이 연세가 많은 관계로 대사관 앞에서 시위가 어려워져 주로 지역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실제 위안소가 설치되었던 장소를 탐방하는 일도 한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성과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창립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국여성운동의 공동 과제로 삼아 운동을 벌여온 것이 현재 만 7년 5개월이 되었다. 1998년 4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국제세미나 '여성과 관광문화'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때부터 계산하면 만 10년이 된다. 이제 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운동을 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성과를 이룩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 역사의 뒤안길로 묻힐 뻔 했던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역사의 정면으로 끌어내어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정대협의 운동으로 생존자 할머니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공개적인 증언이 논문으로, 책으로, 연극으로, 영화로 만들어져 역사에 알려지게 되고, 각종 학술 논문, 학위논문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상이 다 밝혀지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

공개적으로 국민과 언론앞에 나타나고 증언함으로써 경멸과 천대를 받던 존재로부터 인간으로 대접받는 존재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리는 아픔도 있지만, 그보다는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긍정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본다. 몇몇 생존자들은 그들의 아픈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개인의 고난을 승화시키고 대중의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였다.

3. '위안부'제도, 전쟁중 강간과 성노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의 수치스런 일로서 덮어두어야 할 것이 아니고 폭력이고 인권유린으로서, 피해자는 우리가 따뜻하게 감싸야 할 대상이라는 것으로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이는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강연회, 생존자 할머니들을 위한 위로잔치,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정기적인 수요시위, 나눔의 집 방문객에 대한 살아있는 역사 교육, 지속적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 정부로 하여금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생존 '위안부'에 대한 생활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대협의 운동으로 1993년 5월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생존자 1인당 일시지원금 500만원과 월 50만원의 생계비 지원,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입주권등이 주어지고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지역에 따라 액수와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물질적인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다.

5. UN 등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의 공식조사와 보고서 채택을 이끌어 냄으로써 전쟁중 여성인권 관련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프로그램', 국제법률가협회(ICJ)의 1994년 보고서, 1995년의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 1996년 UN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쿠마라스와미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군대 성노예 보고서,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로서, 이는 국제법 위반이고 이에 대해 공식사죄 및 책임자 처벌, 법적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

였다. 이는 전쟁중에 이루어지는 강간, 성노예 등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당연하고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설립내용에도 반영되고 있다.

6. 미국과 한국에서 일본 전범 입국금지 조치를 이루어 내었다.

미국은 1996년 12월 법무성의 발표로, 한국은 1997년 11월 국회에서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전범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입국이 금지되는 일본 전범자 중 '위안부'제도 관련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7. 아시아 피해국들과 일본의 연대형성을 통해 아시아 지역 여성들간의 연대, 여성운동을 강화하였다.

1988년 '위안부'문제가 제기된 이후부터 일본의 여성운동과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1992년 첫 아시아 연대회의를 한 이후부터 아시아 지역의 여성들간에 연대활동이 모색되었다. 피해자와 여성운동과의 연대는 증언모임, 법적소송 지원활동, 재정적 지원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각국의 여성운동간의 연대도 매년의 아시아 연대회의를 통해, 또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여성운동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운동은 국내, 아시아, 국제적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인권증진에 기여하였다. 특히 전쟁중 여성에게 가해지

는 인권유린의 극단적 형태로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실상을 알려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함으로써 인류역사에 다시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지은희 (정대협 기획위원장)

한국 정대협 운동은 이제 두 번째의 커다란 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 전기는 제52차 UN 인권위원회에서 여성폭력문제 특별 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의 권고안이 채택된 일이었다.

위안소의 설치가 국제법 위반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것, 피해자 개개인에게 배상할 것, 사회문서공개, 역사교육과 함께 가능한 한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 할 것 등 정대협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권고안이 일본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것은 정대협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다.

두 번째 전기는 7년 이상이 넘는 운동과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바꾸도록 한 일이다. 한국 정부는 이제 명백하게 공식적으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개인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언명하고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선지급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간위로금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며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 국민기금'이 더 이상 필요없음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이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직도 피해자의 생활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우리는 이제 할머니들의 생활상의 곤란이라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들의 7대요구 관철을 위해 더 힘차게 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운동을 성공시키기위한 향후 10대 중요과제는 다음과 같다.

1. UN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일본정부로 하여금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서의 권고안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일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본

이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국제적 압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국제적 압력 중의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행한 바 있는 일본전범의 입국금지조치를 유럽각국이 취하도록 하여 일본의 전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일이다.

우리는 ASEM회의 개최에 맞추어 한국 NGO회의를 구성하여 ASEM에서 인권, 복지, 환경 문제 등이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 포럼을 열 것을 요구하였는데 앞으로는 유럽 NGO와의 연대를 촉진하여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하여 각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운동해 나아갈 것이다.

3. 보다 직접적 압력은 ILO 총회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임을 확인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1930년 6월 28일 국제노동기구의 29번째 협약으로 탄생한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일본은 1932년에 가입했고, 일본군'위안부'제도는 강제노동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었으므로 일본정부가 이 조약을 위반할 것임은 자명하다. 문제는 어떻게 일본정부의 ILO 분담금을 앞세운 로비활동을 이겨내며 ILO 총회 의결을

성취해 내는가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NGO단체들의 적극적 활동이 요청된다.

4. 책임자 처벌운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도 분명히 가능한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대협은 1993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의 사미다마겐에서 열린 제2차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책임자 처벌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참석자들은 책

임자 처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일본의 대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정신대 문제 해결운동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염려하여 이 요구를 정면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 운동가들의 이러한 염려에 대해 한편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로 이러한 한계 때문에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열린 극동국제 군사 재판소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저지른 군인들의 강간행위를 비인도적 범죄로 처벌한 선례가 있다. 또한 네덜란드 출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후 1948년 3월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 설치된 전범재판소에서 1명의 일본인 장교가 사형을 선고받는 등 강제매춘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13명 가운데 9명이 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국제적 선례가 있다. 우리는 일본내에 자료가 완전히 공개되고 진상규명이 진전되어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반드시 밝혀지고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운동은 강화되어야 한다.

5. 일본의 운동단체와 함께할 중요한 운동과제는 특별법제정운동이다.

이미 특별법제정운동은 다양한 그룹에 의해 진척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단계에서 필요한 특별법의 내용은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배상문제를 다룬 것이라야 한다. 한때 고려되었던 할머니들의 고통과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안할 잠정적 조치안은 이제 그 필요가 해소되었으므로 이제는 일본정부의 개인배상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6.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측은 실패를 자인하여 해체하고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을 다시 시작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다.

할머니들의 의료, 주택문제는 한국정부와 한국국민

들에 의해 해결되었고, 이제 한국정부에 의한 생활지원금이 지불되고 매월 생활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단체에 의해 지급되므로 이제 우리들이 함께 할 운동은 할머니들의 생활걱정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시켜드리는 일일 것이다.

7.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요구인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상규명과 개인배상책임 이행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일본의 책임 및 배상 등 법적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를 묻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펴나갈 것이다.

쿠마라스와미 권고안에도 이 문제는 명시되어 있는데 비정부단체도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는 노력을 할 것과 북한정부와 한국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문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는 '일체의 국가간 개인간의 배상문제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완료 되었으므로 정부가 직접 보상할 계획이 없다' (98.3.31)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양국의 입장이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를 구하거나 상설중재재판소의 견해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일본정부는 94년 11월 정대협이 제안한 국제중재재판소(PCA)에 가서 국제법적 판단을 받아보자는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한국정부의 입장도 배치되는 상황이므로 당당하게 국제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양국정부 모두가 국제사법재판소의 견해를 묻도록 운동할 것이다.

8. 운동의 결속력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아시아 피해국 간의 연대와 특히 일본 여성운동, 사회운동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아시아 피해국 각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수준이 각기 다르고 특히 정부의 입장들이 서로 다르다. 일본정부는 아시아 피해국의 각기 다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국간의 분리를 일으키고 한국내에서도

피해 할머니들간의 분열을 가져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이해를 증대시켜 연대들을 강화시킬 것이다.

9. 한국에서도 진상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이제부터 '전쟁과 여성' 사료관의 건립을 준비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조선의 처녀들이 버려진 채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에 대한 현장조사는 본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최근 정신대 연구소에서는 중국 동북지역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현지조사에서 일본군이 성병치료나 임신방지를 위해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수은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지금도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규모, 어디로 어떻게 끌려가서 어떤 비인간적 대우를 받았는지 패전후 어떻게 버려졌는지에 대한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버려진 피해자들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연구자들은 진상규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10.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계기로 우리는 국제적 인권기구 설립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다.

지금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을 위하여 오는 6월 중순에 로마에서는 유엔 회원국이 모여 최종적으로 규약을 논의할 예정이며 여기에서도 여성들은 1) 전쟁중의 여성강간 등 여성인권문제가 전쟁문제로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 2) 판사중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 3) 강간 등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는 문제를 확실히 다루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전세계에 대륙별로 인권기구가 있으나 아시아 지역에만 없음을 감안할 때 아시아에도 이러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지역인권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국제적 운동의 전개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와같은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는 정대협이 초기부터 내걸었던 7대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그래서 인류역사상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책임지는 선례를 역사에 남길 것이다.

정대협 운동 - 생존자 복지활동의 현황과 과제

김신실 (정대협 피해자복지위원장)

1. 여는 글

한국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대협이 조직되고, 활동을 시작한지 어언 8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아시아여성들과의 연대로, 세계여성들과의 연대로 함께 해 온 투쟁은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민족 자존심의 회복을 위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여성들의 존엄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아시아연대, 국제연대 운동의 과정에서 여성인권 회복을 위한 운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여성들과 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본질적인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 운동의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정부의 태도와 입장의 변화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의 운동의 성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다소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할머니들은 다소 안정을 회복하여 살고 계십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는 대부분 안정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찾을 수 있겠으나 본 발표에서는 생존자 할머니들의 복지활동과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정대협 생존자 복지활동의 시작과 그 과정

일제시대 전쟁으로 인해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으신 '정신대' 할머니들이 과거의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시던 때, 그 분들의 생활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1990년 정대협이 그 첫 발을 내딛은 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머니들을 위한 첫 위로행사

정대협은 1991년 초에 정신대 신고전화를 개설하여 생존자 찾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신고 전화에 1년동안 약 200여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는데, 이 중 60여명은 직접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당한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정대협은 생존해 계신 분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1992년 5월 1-2일, 1박 2일동안 전국에서 신고한 생존자들을 서울에 초청하여 위로잔치를 가졌습니다. 그 때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지에서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각각 흩어져 있던 할머니들 37명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정대협은 할머니들의 생활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택문제가 모두의 큰 걱정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덕경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의 경우, 남의 비닐하우스 일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압전기가 흐르고 있는 농경지에 물을 대주기 위해 사용하던 물탱크실 안에 동네 청년들이 방을 만들어 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인이 바뀌면서 나가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매일 새마을 쿠키사업을 나가서 일을 하지만 올라가는 월세와 물가를 따라잡을 수 없어 살길이 막막하다는 걱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택문제 이외에도 남의 집 파출부, 식당일 등을 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위안부 휴유증 치료하느라 병원비에 쓰고 나니 한푼도 모아진게 없다는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이 모임 이후부터 정대협은 생존자 발굴과

함께 그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에 더욱 힘을 쏟아왔습니다.

2) 한국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 생활대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정대협이 가장 먼저 서둘렀던 것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구호조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고, 외무부 '정신대실무대책반'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에 대책수립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정부는 국내의 여론과 정대협의 끊임없는 요구에 따라 1993년 5월, 임시국회에서 '일제하 군대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고, 그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은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권 우선 부여, 일시금 500만원 지급, 월 15만원 생활비 지원, 의료 무료혜택" 등이었습니다. 매월 지원하는 생활비는 1995년에는 20만원, 1996년에는 25만원, 1997년부터는 50만원의 생활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민간단체와의 연대활동

정대협은 또한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인들과 함께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기관 등에 대해 피해자들을 민족의 품으로 감싸안자는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피해자 돕기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와 지역 민간단체와의 자매결연 등도 추진시켜 왔습니다.

가. 모금활동 -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법적 배상은 할 수 없고, 민간차원의 위로금 지급"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위로금은 우리가!, 일본정부는 법적 배상!"이라며 모금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1992년 12월

1일 정대협은 '정신대 할머니 생활기금모금 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모금활동을 벌여 그 당시 신고했던 할머니 62명에게 250만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통한 모금활동과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려 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대협은 1996년 10월 18일, '강제연행당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를 조직하여 모금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정대협은 SBS 모금운동과 ARS를 통한 모금운동, 명동입구에서 한 거리모금운동 등 활발한 모금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97년 5월 31일까지 모금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154명에게 3,517,500원과(일본 송신도 할머니 포함), 미국과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할머니 2명에게 각각 3,517,250원을 전달한 후 해산했습니다.

시민연대 이후에도 정대협은 1997년 8월 11일부터 MBC와 동아일보, 한국일보의 공동주최로 "정신대 할머니 지키기 2차 모금운동"을 계속하여 현재 약 5억원이 모였습니다. 또한 복음성가 가수인 홍순관 씨는 1995년부터 "정신대할머니 돕기" 전국 100교회 순회콘서트를 통해 모금된 것을 전국의 할머니들에게 지급해왔습니다.

나. 나눔의 집 - 정대협의 회원단체였던 불교 인권위원회 여성위원회가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전셋집을 시작으로 개소식을 갖고 6명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한 '나눔의 집'은 1995년 12월에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9명의 할머니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다. 서울중앙병원 -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현대그룹에서 운영하는 '서울중앙병원'에서는 정신대할머니들에 대한 평생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많은 할머니들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한 예로 강덕경할머니의 경우 2년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6500만원 가량이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피해자 할머니들은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라. 천호 한의원 - 1994년부터 서울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천호 한의원에서 무료 한방진료와 치료를 함으로써 이 운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 해모수치과 - 1997년 할머니들에 대한 치과진료가 의료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할머니들의 의지를 해주고, 치과진료를 무료로 해오고 있습니다.

바. 할머니들 심리치료의 일환으로 이경실선생의 지도로 시작한 그림그리기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덕경할머니, 김순덕할머니, 이용녀할머니의 그림이 엮서로까지 제작되어 일반인들의 깊은 관심과 호응 속에 판매되고 있으며, 여러 곳에 전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글배우기는 시도는 했지만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사. 정대협 생존자복지지원회 활동 - 동시에 정대협은 정대협 기구내에 생존자복지위원회를 조직하고, 할머니들의 병원알선, 주택문제, 장례절차, 가족상담 문제 등을 맡아왔으며, 매년 위로행사 및 나들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정대협 회원단체인 여성교회의 경우, 매년 5월, 할머니들을 예배에 초청하여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왔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8년 1월 1일, 대구에서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결성되어 대구 경북지역에 살고 있는 정신대할머니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대협 생존자복지지원회는 활동비와는 별도로 재정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여 할머니들이 병원입원시 위로비로 1인당 100,000원 지원, 아플 때 약값 보조 및 위로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망할 경우 협력단체와 함께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할머니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

중요한 것은 정대협의 진상규명, 법적 책임 촉구 활동, 생존자 지원활동 등을 통해 생존자들의 생활이 심

리적이고 물질적으로 다소 안정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고 당시에 피해자 할머니들은 피해 의식 때문에 대중 앞에 서는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통해 일본군위안부의 체험을 폭로한 이후에는 운동의 주체자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의 집회에 직접 참여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써 스스로 피해 의식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그런 용기있고 주체적인 활동은 한국 여성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부장적 군국주의하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당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으며, 전쟁중에 여성이 겪게 되는 집단강간, 성노예의 문제를 심각한 여성 인권문제로 인식시키고, 관심갖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 김학순 할머니의 경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매년 "한국여성대회"시 시상하는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1993년에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빠른 시일안에 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총 152명의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아직도 계셔야 할 것같은 김학순 할머니도 계시지 않고, 그 외에도 많은 할머니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동에 큰 힘이 되었던 강덕경 할머니도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후 중국에 버려졌던 정수재 할머니와 정학수 할머니가 전후 50년이 지난 후에야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찾아왔는데, 운동의 끝을 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무한지역에서 아직 고향땅을 밟지 못한 할머니들도 한분 두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생존해 계신 분들도 대부분이 연로하고 병약하여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존자들은 일본이 침략전쟁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해 저지른 성노예 범죄, 비인도적인 범죄를 증거할 수 있는 역사의 산 증인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중국 증언집이 3권 출판되었으나 할머니들이 살아계

실 때 할머니들의 증언을 채록하여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성과 전쟁 사료관'을 통해 여성의 성폭력 피해자들의 희생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하고 알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2차대전이 종전되지 53년, 그리고 정대협이 활동을 시작한지 8년이 되는 지금까지, 할머니들과 함께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운동이 잘못된 과거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고, 여성의 인권을 위한 길이며,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어 우리들의 연대의 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인권·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로, 세계 여성의 연대로, 아시아 여성의 연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긴 했지만 피해 여성들의 어렵고 힘든 삶의 질고와 상처를 우리가 함께 보듬고 일본 군국주의에 빼앗긴 후 아직도 되찾아 오지 못한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반드시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생존자 복지활동의 최고 목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시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존자들과 함께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며 어떤 전쟁도, 어떤 군국주의도 이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활동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과 과제

이미경 (국회의원 / 국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모임 대표)

1.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

'90년대에 들어와서 활성화된 일본군'위안부'범죄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운동은 피해자의 조직화, 국제적인 여론조성, 일본군의 직접관여 시인 등 많은 성과를 낳았다. 이런 성과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의 노력에 의존해 왔으며, 국회는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96년 5월에 개원된 15대 국회는 개혁적인 초선의원들의 대거 진출과 전체 의석에서는 3%에 불과하지만 국회사상 처음으로 9명의 여성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일본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여성문제, 민족문제를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일본군'위안부'범죄의 일상적인 연구, 각종 정책 제언, 입법 활동, '위안부'범죄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일본의 '국민기금'은 절대 안된다는 점과 일본정부 차원의 법적 배상, 명예회복 조치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1)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
제15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된 첫 활동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었다. '96년 6월, 9명의 여성의원들이 공동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현역 의원의 90%가 넘는 270명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본정부는 국민기금을 철회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실시하라'는 서명받았다. 서명의 결과는 일본 총리, 중의원·참의원 등 정계에 전달되었으며, 본인이 서명에 참여한 국회

의원을 대표하여 일본에서 중의원 의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이 서명운동은 국회에서 일본군'위안부'운동이 활성화되는 기초를 제공했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된다는 인식을 분명히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 결성

서명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97년 7월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28명의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 연구모임을 결성했다. 이 연구모임은 '96년 UN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 대로 일본정부가 '위안부'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연구활동과 입법, 국제연대활동 등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출입국관리법의 개정

비인도적 범죄를 자행한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출입을 금지한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범죄로써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 그리고 외교적으로 일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96년 12월, 미국 법무성이 '위안부'범죄와 731부대 생체실험 등에 가담한 일본전범에 대해 미국내 '출입금지'를 법률화했다는 언론보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었다. 미국의 사례를 접하고 바로 연구에 착수하여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우리나라 출입을 금지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법률은 올해 3월 14일부터 시행된다.

4)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증액

우리나라 정부는 '93년부터 위안부피해자들에게 500만원의 일시금과 매월 25만원씩의 생계비,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등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매월 25만원의 생계비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이 국회에 '위안부'피해자들의 생계비를 50만원으로 증액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월 생계비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노력이 더욱 컸다. 결국 피해자들은 작년부터 매월 50만원의 생계비를 받고 있는데, 행정부에서 제출된 예산이 100%이상 증액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 IPU총회 여성의원회의에서 발언

지난 '97년 4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97차 IPU총회의 '여성의원회의'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거론했으며, 제98차 IPU총회 여성의원회의 등에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각국 의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6) 우리정부에 "우선보상, 사후 일본정부 배상 촉구"정책 실행 제안

신정부에 대해서는 대만의 경우와 같이 우리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받아내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현재 신정부는 차관회의에서 일본의 '국민기금'을 막기 위한 조치로 1인당 3,800만원씩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며, 곧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정식으로 배상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 정책이 실행될 경우 일본정부는 더 이상 '국민기금'을 강행지급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 운동의 성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2. 앞으로의 계획

1) 국회의원간의 국제연대 강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양심세력과 긴밀한 연대를 맺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이런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첫 활동으로 오는 9월 16일~17일에는 국회의원, 민간단체 등을 초청하여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2)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법령시효 비적용에 관한 협약" 연구및 가입동의안 제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협약을 연구하여 우리정부가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시효부적용협약'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 협약은 '68년 11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협약은 2차 세계대전 후 법령시효를 이유로 전범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채택되었다.

3) 한-일 교과서 비교연구 및 비라직한 교육방안 제시

한-일 역사교과서의 '위안부'관련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결과 제시된 정책과제는 교육부에 제출하여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4) 결의문 채택

지난 해 10월, 국회는 41명의 국회의원 공동명의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일본군'위안부'문제가 비인도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법적 배상과 진상공개,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식으로 일본정부에 '위안부'범죄를 올바르게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3. 맺는 말

7년이 넘게 이어져온 이 운동은 그동안 많은 성과와 함께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운동의 보다 효과적인 전진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의회, 정부 등의 공동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위안부'문제의 올바르고 보다 빠른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공동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1)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것처럼 다른 피해국도 비인도적 범죄에 가담한 '일본군전범'의 출입국 금지를 국내법으로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여러 피해국에서 이같은 법이 채택될 경우 일본정부에게는 외교적으로 큰 압력이 될 것이다.

2) 대만정부의 경우와 같이 '국민기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각국 정부가 먼저 보상하고, 일본정부에게 정식으로 배상을 청구하도록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도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오는 6월 유엔에서는 대량학살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상설화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설화될 경우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여성에 대한 잔혹한 성노예범죄인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범죄의 해결을 위해 모여진 힘과 경험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각종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성장해야 할 것이다.

4월 16일 오전

한국측 발제에 대한 질의, 응답

〈신혜수, 지은희 발제에 대한 질의 응답〉

▶ 보충발언

대만은 피해자들을 위해 유명한 역사학자가 100점의 물품을 경매하여 개개인에게 200만 엔씩을 지급하였다. 대만정부도 생존자에게 각각 200만엔을 제공하여 총 400만엔을 지원하였다. 이것은 일본의 국민기금이 주는 액수의 두배로, 더 이상 국민기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만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의료와 기타 복지비 등에 대해서는 미화 500불을 제공하였다.

대만 구의회는 일본 변호사연합(일본연)를 통해 일본정부에 '인권구제'라는 문서를 전달했으며, 1997년 7월에는 일본연에서 대만측에 권고사항을 전달하였고, 1998년 3월에 일본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 배상권고안을 전달하였다.

〈김신실, 이미경 발제에 대한 질의 응답〉

▶ 질문: 전범 입국금지 명단에 들어 있어야 할 나카소네가 대통령 취임에 참석하였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을 알고 싶다.

☞ 답변: 나카소네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정대협은 이에 대한 항의집회를 나카소네가 묵는 숙소에서 가졌다. 한국정부는 정신대 문제를 방치하고 무관심하게 대한 것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전후처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 또 전범금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전범들의 명단을 조사하는 일을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워싱턴 정대위에서는 전범 명단을 만명까지 늘리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

는 제의를 해왔으므로 일본에서 위안소 설립책임자, 전범 명단 작성에 협조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질문: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한다는 것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정대협의 구체적인 입장을 말해달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 답변: 할머니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들의 과거를 수치가 아니라 일본의 전쟁범죄에 의한 역사적 희생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응하여 한국인 스스로 할머니들을 지키겠다는 모금운동은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보호해드리는 일이 그 내용이다. 언젠가 일본에서 항의집회를 할 때, 일본의 여기자가 할머니들에게 "돈을 얼마나 주면 좋겠느냐"고 질문했다. 그 말에 할머니들이 너무 기막혀 하시면서 대답하시길, "빼앗긴 청춘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셨다. 돈으로만 이 문제를 배상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부당하다. '위안부' 문제를 인권유린의 차원에서 풀어가며 국민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 질문: 정대협이 추진하고 있는 '여성과 전쟁' 자료관과 나눔의 집에서 하고 있는 기념관의 차이는 있는가?

☞ 답변: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눔의 집이 하고 있는 기념관은 주로 할머니들의 비품을 중심으로 전시될 것이며, 전쟁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증거를 담은 유품 전시관의 성격이다. 반면,

정대협이 추진하는 '여성과 전쟁' 자료관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삶뿐만 아니라 전쟁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모아 운동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제공할 것이다. 동덕여대도 여성박물관을 만들면서 정신대 자료실을 만들었는데, 학술적인 자료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자료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 질문: 책임자 처벌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일본의 단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들인가?

☞ 답변: 지금까지 일본에 15번 정도 갔다. 갈 때마다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처벌자 책임 문제를 전달했다. 그러나 일본 시민단체들은 일본국민의 정서를 볼 때 책임자 처벌운동은 아직까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았다. 현재 일본 우익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책임자 처벌운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운동에서 원칙은 중요하다.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원칙이며, 비록 소수가 찬성한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가 죽은 후에라도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며 반드시 책임자는 밝혀질 것이다.

▶ 질문: '위안부' 문제를 연구하는 의원모임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국회의 입장은 어떠한가?

☞ 답변: 한국 국회가 정대협과 일치된 행동을 보인 것은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촉진제로 작용했다. 국제적으로 이 사건이 채택되었다는 점이 국회와 정대협의 입장이 일치될 보게 만들었다.

▶ 질문: 지금까지 국민기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60명이라고 알고 있다. 그중 7명이 한국인이었는데, 이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 답변: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은 모금은 원래 목적이 일본의 국민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을 위해 모은 것이므로, 일본의 국민기금을 이미 받은 분들에게는 지

급하지 않았다. 5월에 지급할 한국정부의 지원금은 이미 국민기금을 받은 7명에게 드린 후, 할머니들이 국민기금을 일본에게 되돌려드리는 방안을 권유할 것이며, 아마 할머니들도 이에 응하시리라고 생각한다.

▶ 질문: 현재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시 731부대와 위안부와 관련된 전범들의 출입국을 금지시켰는데 전범 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가?

☞ 답변: 미국정부가 확보한 전범 명단은 32명으로,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정부가 전범 명단을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정부측은 미국무성에 명단을 교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할 것 같다. 이같은 일본전범에 대한 출입국금지법이 다른 나라에도 확대적용하면 더 많은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보충발언: 정대협이 제시한 향후과제 10개항은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나, 현재 이 일을 다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집중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태도는 긴급구제금융 시대를 맞아서 일본과의 관계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것 같다. 앞으로 이 운동은 순수 민간운동 차원에서 전개해 나아가야 할 것 같다.

▶ 보충발언: 정신대연구소는 1990년 정대협 결성 이전부터 이 문제를 연구한 유일한 단체이다. 자료조사와 피해자들의 증언채록, 대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할머니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캄보디아 훈할머니가 50년만에 한국 국적을 찾았고, 중국에도 많은 할머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싶다. 증언 채록과정에서 할머니들마

다 거주지에 따라 처지와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에 사시는 할머니들에 대한 시민의 애정과 관심이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지방에 사시는 할머니들이 소외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 할머니들이 갖고 있는 한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 운동단체들이 할머니들이 심리치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활동가들마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우 할머니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다.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 보충발언: 책임자의 처벌문제가 제기되면, 일본측 참가자들은 망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사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 뒤 동경재판소에서 할머니들과 박원순 변호사가 쓴 글을 번역하면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일본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공감했다. 우리는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일본정부에게 '불처벌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비록 우익의 협박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일본사회가 '무덤에 간 사람들의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속담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적용하고 있더라도,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책임자처벌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

▶ 보충발언: '위안부' 운동은 한국여성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나는 미국에 36년 동안 살았다. 최근 5년동안 '위안부'에 관련한 책과 기록영화를 만들면서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불처벌의 책임'을 깨닫게 되었다. '불처벌'의 논리는 정치적인 힘이 작용한 결과이며 인종차별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진지하게 대응할 때 진정한 의미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제5차 아시아 연대회의의 보고

김영희 (리드레스국제캠페인 /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1. 보고에 임하며

1995년 7월에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이하 국민기금)이 발족한 이후, 일본정부로부터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던 우리들의 투쟁은 국민기금의 철회, 반대투쟁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기금을 발족시킨 일본정부의 의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피해자와 강렬하게 결합하여 각국에서 연대하는 시민운동을 분열 고립시켜서 전체운동을 좁히고 침묵시키려는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전후책임, 전후보상요구운동을 일본 국내나 국제적 여론에서 돌출하여 나타난 '위안부문제'로부터 종식시키고 전체적인 전후보상의 요구도 막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가 보상을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누계 40조엔이라고 하는 일본인 군인이나 유족에 대한 은급이나 연금지급도 보상은 아니고 전황의 군대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싸웠던 것에 대한 포상이며, 대만의 전(前)일본군병사나 사하린 이산가족, 한국의 피폭자에 대한 지원도 인도적 조치의 틀 안에서 행한 것입니다.

일단 보상을 시작하면 '위안부문제' 이외의 전후보상문제까지 무한히 확산될 것이며 이것은 전후 일본이 구축해 온 외교체제의 개편에까지 연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일본정부는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조약상으로도 외교상으로도 보상문제는 해결이 끝났다'는 논리를 유포하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물밑작업으로 얻어낸 양해사항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해 왔습니다. 나아가서 피해자가 고령임으로 '차선책으로 부득이하다'며 그럴듯한 이유를 달고 베이징여성대회나 유엔인권위원회, ILO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정부가 최선의 노력으로 대응하

고 있다는 듯이 선전공작을 하여 안팎으로 지지를 얻으려고 해왔습니다.

뒤집으면, 우리들의 투쟁은 1) 일본정부로부터 전례가 없는 보상을 실현시켜야 하고, 2) 과거에 체결한 조약의 해석이나 재해석을 요구하며 피해국 정부를 움직이도록 해나가야 하며, 나아가서는 3) '국민기금' 수령문제를 안고 나가면서도 고령의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결이 되도록 해야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지만 수많은 곤란을 안았던 운동이었습니다.

'국민기금' 발족 당시, '아사히'나 '마이니찌'등의 신문사설이 '국민기금'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냐 여부는 일본의 국익문제이니 꼭 성공시키자라고 논조를 높인 것처럼 '국민기금'과 일본정부는 주요 미디어를 동원하고 매년 4억8천만엔의 정부예산을 투입하였고 선의의 국민까지 모금운동에 동원하여 문자 그대로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기금'정책을 강행해왔습니다.

현 운영심의위원장인 다카자기(高崎宗司)씨는 "일본정부에게 보상을 시킨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우리들의 투쟁은 돈도, 권력도 없는 시민이 일본국가를 대상으로 정면에서 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곤란한 투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2년이상이나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서 싸워왔고 각국의 운동의 연대가 단절되는 일없이 지금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회의의 테마가 말하듯이, 이제는 '국민기금'을 극복하고 일본정부를 향하여 공식사죄와 배상요구의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지평에 서게 된 것에 승리를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피해자 여러분, 각국의 관련단체, 지원단체의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 '국민기금' 지급후의 공방

1) '국민기금'의 수법과 전개

'국민기금'의 수법은 각국의 운동상황에 파고들어서 피해자 사이, 피해자와 지원 관련단체 사이, 각국의 운동 사이의 연대를 각각 단절시키고 반목하게 하고 해당정부나 국제여론에서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일시금의 수령 대상자를 한국, 필리핀, 대만의 피해자 300명에 한정함으로써 인도네시아나 중국등지의 운동과 분단시켰고 강간당한 피해자도 제외하고, 나아가서는 3개국에 대해서도 해당정부나 행정부의 지원이 없어서 가난한 필리핀의 경제적 약점에 파고들어서 지급을 개시하는 등 사사건건 운동의 분열과 이간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국민기금'의 목적은 피해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 그 숫자를 달성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납득을 받아냈다는 면죄부를 얻는데 있었습니다. 일시금에는 수상의 편지와 일본정부로부터 의료복지 서비스를 첨가하여 3점세트로 하여, 일본국민의 선의도 있고, 일본정부가 국고로부터 돈도 거출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일본국 수상의 사과편지도 있지않는가, 과거 미국이나 캐나다가 했던 보상과 어디가 다른가라고, 보상을 위장하여 피해자는 물론 선의의 일본국민이나 국제여론까지도 기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유희(레트릭)는 1월6일 한겨레신문 등 한국신문 세군대에 기습적으로 게재했던 '국민기금'의 광고내용에 현저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와 일체화한 '국민기금'방식을 일본국내에서는 민간의 선의의 '보상'운동이라고 강조하고 국제무대에서는 정부가 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금'의 일시금 수령문제만의 사안을 왜소화하여 '국민기금'반대운동은 피해자들의 받는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캠페인까지 전개해왔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일시금을 받은 한국 피해자들을 TV 화면에 등장시켜서 정대협이나 시민연대가 일시금을 받으려는 피해자를 차별하고 '이지메'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선전하여 가해측이 피해자측을 처단하는, '화해'나 '보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 '국민기금' 반대운동의 전개

원래 '위안부'문제의 해결은 '국민기금'의 수령문제만으로 왜소화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수령문제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은 전혀 별도의 것입니다. 우리들의 운동은 '국민기금'이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과제이며, 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지않기 위한 장치라고 간파했고, '국민기금'에 대하여 각국이 일치하여 반대의 주장을 내걸었습니다.

'국민기금'반대운동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의 운동이며, 목적은 '국민기금'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일본정부에게 요구를 하기 위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국민기금'과 일본정부가 마련해 놓은 일시금 수령문제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한 한국이나 대만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시련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대'라고 하는 주장만으로 일관해도 각국의 운동이 안고 있는 상황은 다양하여 '국민기금'의 수령을 일체히 거부하는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지원자의 관계도 나라에 따라 다양하여 동일한 조직을 함께 만들고 있는 단체도 있는가 하면, 따로 따로 된 단체도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부에서 생활지원이 있는 한국이나 대만같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지원은 일체 없을 뿐아니라 해당정부가 일본정부와 결탁하여 '국민기금'정책을 진행하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민기금'의 대상도 되어있지 않고 일시금 지급의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아가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한국이나 대만과 점령하에 놓여진 필리핀, 인도네시아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경과도 각기의 사회적 논조나 국민감정도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각국상황의 차이를 전제로 한 운동방

침이나 전략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서로 존중하는 귀중한 경험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쌓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생활상의 다양한 사정으로 국민기금을 받은 필리핀의 피해자들이 하시모토총리의 편지를 거부하여 반송하고 의료복지서비스에 주문을 다는 방법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선의와 정부로부터의 거출, 수상의 편지의 3가지가 세트로 주어져도 보상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일본정부에게 요구를 내걸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3월 한국·조선인 BC급 전범보상 재판 결심에서 원고인 이학래씨는 "사죄와 보상은 일신동체의 것으로서 분리할 수 없다"고 '상징적 보상'을 주장했고 연합군 POW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BC재판에서는 1월6일의 '국민기금' 광고를 아시아 피해국이 공동으로 한겨레 신문에 게재했던 반론광고와 함께 증거로 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는 피해자의 개인보상을 부인하고 '국민기금'과 고령자시설의 건설을 합의한 인도네시아정부에게 LBH와 피해자가 "국민기금에 반대하여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보상을 요구해달라"는 공개서한이나 요청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기금'에 대항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했던 대만이나 한국에서는 끈질기게 정부에 요청하여 민간모금에 정부가 플러스하여 '국민기금'과 거의 동액의 지원금의 입체를 결정하여,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어려운 결단 앞에서 있었던 피해자와 운동체가 겨우 '국민기금' 수령문제의 압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3. 현 시점에서의 '국민기금'의 평가와 운동의 종착점

이제는 '국민기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국민기금' 측은 수령자의 숫자로는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최근은 수령자 수와 내역을 공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공식 확인이지만, 3월로 수령자수는 65명, 현재 아직도 80% 가까운 피해자가 받기를

거부하고 있기에 숫자상으로도 '국민기금'이 파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발족 당시, 우선 고령의 피해자에게 작은 '보상'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민기금'을 진행시키고 그것을 단계로 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아낸다고 주장하던 와다하루기(和田春樹)씨들도 최근에는 과거의 주장을 잊은듯 "수상의 사과편지는 위대한 성과였다"고 일본정부의 대변인으로 오인할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를 알기 시작한 '국민기금' 모금 협력자들은 "일본정부의 책임을 대신하기 위해서 모금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보상금'이라면 우리가 낸 돈을 다시 받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NGO에 기부하겠다"는 호소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운동을 분열시키는 '국민기금'의 수법은 피해자측에 상처를 주었고, 자기정당화와 강압적으로 수령을 강요하는 자세는 피해자나 운동체 뿐만 아니라 피해국 정부의 반발도 샀습니다. 그 결과, 당초 '국민기금'이 발전적이라고 평가하고 과정을 바라보던 한국 김영삼대통령도 유엔 쿠마라스와미 권고나 정대협 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정부에게 "피해자와 운동이 납득하는 해결"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김대중정부가 탄생한 지금,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위안부'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일조약의 재해석을 시사하면서 '인권문제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부를 움직여서 다시금 외교문제화 하는데까지 운동은 도달했습니다. '조약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해결은 끝났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당시 여당 3당이 '국민기금' 정책에 합의했지만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다시 취급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3당합의의 근거가 무너진 지금, 일본정부가 '국민기금' 정책을 재정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일본변호사연합은 작년 7월에 대만의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에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에 개선이 보이지 않음으로 재삼 권고한다'

고 하며, 금년 3월6일 하시모토총리에게 재삼 권고를 했습니다. 권고서는 '위안부'피해자에게 대한 가해행위는 국가와 군의 책임이며, "국민기금"의 '보상금' 교부는 법적 보상이 아니며 불충분하고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다음, 보상조치를 포함하는 입법해결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명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기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이 명백해지는 한편, 국제적인 정세는 우리들의 운동에게 유리하게 되어갔습니다. 작년만으로도 ILO의 전문가 위원회가 일본정부는 ILO 29호조약에 위반한다고 두 번째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미국에서는 '위안부' 관계자의 제2차 입국 금지조치를 결정, 미하원이나 네덜란드의 의회에서도 결의안이 상정되는 등, 일본정부에 대해 전쟁책임을 져야한다는 추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정부가 '국민기금'으로 책임을 벗으려고 급급하고 있는 도중에 95년 6월에는 오스트리아정부가 나치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을 결정, 96년 1월에는 나치피해자인 폴란드 정부도 유대인학살에 가담했던 것을 사죄, 같은 해 12월에는 독일과 체코가 쌍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선언에 서명하여 '미래기금'을 창설, 스위스정부도 유대인유족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여 97년 1월에 '유대인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나아가서 금년 1월 독일정부는 동구권국가의 나치피해자에게도 보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후배상을 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 추세가 되었고 일본만이 이러한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리드레스국제캠페인 활동보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이나 '리드레스국제캠페인'도 미력이지만 각국의 운동에 보조를 맞추어서 활동해 왔습니다. 시민기금과 리드레스의 활동은 일본국내운동의 작은 일부이지만 무릅쓰고 소개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후보상실현 시민기금은 '국민기금'이 발족하려는 전날에 발족되었습니다. '국민기금'에 대항하여 시민모금을 받아낸 그것을 만들어서 본래적인 해결을 요구

하는 피해자와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지원이 약한 나라들의 운동이나 피해자에게 생활, 의료지원을 했습니다. '국민기금'의 지급이 강행된 이후, 수령을 거부하며 투쟁하는 필리핀의 로라들에게 정신적 경제적 지원을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힘내라! 로라기금'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기금'을 차버리고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본시민들과 함께 노력하려고 일본시민과 로라 약 80쌍이 파트너를 짜고 편지교환 등의 교류를 지속하며 격려해왔습니다. 작년 1월에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드레스국제캠페인'은 작년 6월의 ILO총회를 향하여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공동으로 요청서를 냈습니다만, 이러한 경험을 기초로 더욱 각국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우리 편으로 하며 일본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일을 목적으로 작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국민기금'과 일본정부가 우리들 운동의 연대를 단절시키려고 한다면 거꾸로 연대를 강화하여 대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의 해결은 이미 한 지역이나 국가의 운동이 개별적으로 일본정부에게 대응하는 것으로는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운동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일본정부에 대한 추궁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힘으로 일본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실현하는 일을 목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본 국내 활동으로 1월6일 한국의 '국민기금' 광고 게재에 즈음하여 항의성명을 냈고, 즉시 각국과 협력하여 반론광고를 내고 일본국내에 확산하는 등, '국민기금'에 대한 비판, 반대활동을 해왔습니다. 또한 자민당을 포함한 정당들에게 요청서나, 무라이마(村山) 전 수상이나 도이(土井)사민당 당수에게 요청활동 등, 국회의원을 향한 활동과 함께 하시모토수상의 편지를 거부한 필리핀의 로라들의 활동에 맞추어 외무성에 요청활동을 하기도 하고, 300회 '수요시위'를 맞아 한일본대사에게 요청서를 보내는 등, 일본정부에게 요

구를 해왔습니다. 연합에 ILO총회에서 견해를 묻는 질문서를 내기도 하고, 자치노(自治勞)나 일교조(日敎組)에게 요청서를 보내어 노동조합에게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론에 호소하기 위해서 주간 '금요일'에 의견 광고를 게재했는데 광고를 본 한 독자의 움직임으로 뉴질랜드의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감메시지가 온 적도 있습니다.

해외활동으로는 8월의 제네바 유엔인권위원회에 한국, 필리핀, 대만과 공동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12월 8일에는 한국, 대만, 필리핀, 미국, 캐나다, 화란의 7개국 9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는 등 각국의 연대를 목적으로 일했습니다. 미국하원의 결의안 상정을 위한 활동에서는 리핀스키의원에게 지지메시지를 보내고 일본계 페루인의 보상요청운동과도 연대하여 미국 의회를 움직이는 일도 염두에 두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뉴욕 타임즈에 의견광고를 게재할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미래를 향하여

국민기금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우리들의 운동은 지금까지 국민기금 수령문제에 할애되어왔던 에너지를 일본정부를 향해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결은 끝났다'라는 논리는 무너졌고 외교적으로도 '국민기금'정책은 힘이 없어졌습니다. 피해국정부의 이해와 협력을 보다 더 얻어가면서 이러한 흐름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각국의 운동의 연대가 우리들에게 강점이 됩니다. 각국 사이의 운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격려하며 보다 더 한층 연대를 강화해 나갑시다.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보상실현의 흐름을 타면서 일본정부에 대한 전쟁책임 추구의 움직임과 연동하며 일본정부를 움직여 나갑시다. 일본국내에서도 입법화를 향하여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은 제출되었고 일본정부가 도망갈 출구도 막아놓았습니다. 그동안 근로정신대, 731부대, 강제연행, 강제노동, 세균전 피해자 등의 재판도 제기

되었고 나아가서 일본정부에 대한 추궁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후보상운동과도 결합하여 일본정부의 결단의 시기를 앞당깁시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했던 강덕경 할머니나 김학순 할머니, '국민기금'을 받은 피해자들조차도 가장 큰 염원은 일본정부로부터 성의 있는 사죄와 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이 돌아가셨지만 유지를 따라서 하루라도 속히 일본정부로부터 해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력이나마 노력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연대운동의 성과와 과제

스즈키 유우코 (鈴木裕子 / 여성전쟁인권학회)

1. 들어가는 말

제1회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이하 아시아연대회의)가 서울에서 열린지 벌써 5년8개월, 일본정부에 의한 '민간기금'='국민기금'공세와의 치열했던 투쟁을 지나 지금 아시아연대운동은 공통의 목표 아래 새롭게 큰 한발자욱을 내디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금전'문제로 왜곡하고 책동에 책동을 더해오던 '국민기금'정책의 파탄은 이제 명백합니다.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은 깨끗이 폐쇄선언을 하고 철수해야 합니다. '자선은 필요없다, 명예회복을 하라'는 피해여성의 피맺힌 외침을 짓밟고 상호간에 분단, 기열, 갈등, 불신을 심는 일에 부심하며 광분했던 책임을 지고 일본정부는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합니다.

거의 4년이 되어가는 '국민기금'에 대한 피해여성과 지원단체, 지원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작년(1997년) 대만정부에 이어서 한국정부도 드디어 움직여서, 김대중 새정권에 의한 정책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김영삼정권의 "죄를 범한 일본이 자기의 책임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해결해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의)보상은 필요 없다,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하라"는 발언의 진의는 도덕적으로 높은 입장에 서서 일본정부의 실천을 촉구하는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정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자세는 결과적으로 일본정부의 '개인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논리에 이용되었고 돕는 일이 되었습니다(제3회 아시아연대회의에서의 양영지씨의 보고 참고).

김대중정권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인권문제로서 명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상조치가 당연"(주 1)하다는 자세를 공식적으로 표명

했고, 이 문제에 대한 자세전환을 선명하게 내걸었고 ('마이니찌신문' 1998년3월19일자 조간 1면 7면참조), 일본정부에 의한 배상실현시까지 선지급할 의향을 내비친 연유입니다(역자 주 - 이 원고가 도착한 다음날, 3월28일에 정부의 차관회의에서는 155명의 할머니들에게 정부의 지원금 49억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정부의 배상을 받으면 이를 국고에 환수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일간신문들에 보도되었다).

한일조약 협정을 방패로 완강하게 개인배상을 거부해 오던 일본정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배상은 하지않음을 전제로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고안되어 강행되었던 '국민기금'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여 막다른 골목에 섰습니다. 피해자나 지원단체가 일관하여 주장하는 법적책임의 이행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2. '위안부' 문제가 조명해내는 아시아의 가부장제

-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

여기서 아시아연대회의에 즈음하여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제1회연대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은 1992년 8월10-11일로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아시아여성신학교육원이 주최하고 한국, 대만, 태국, 필리핀, 홍콩, 일본의 6개국에서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일한국인 여성그룹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행동네트워크'와 '매대춘문제와 연대하는 회의' 멤버 약 30명이 참가했습니다.

제1회 연대회의에서 제가 특히 인상을 받았던 것은 '위안부'문제는 회의에 참가한 아시아여성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로서 선명하게 인식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배후에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략과 그것과 한짝이 되어 행해지고 있는 아시아여성에 대한 '성침략'이 있었다고 생각

됩니다.

군사화, 경제침략,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 여전히 여성을 억압하고 있는 가부장제 아래, 여성의 권리는 박탈되고 여성에 대한 성억압,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으며 '과거의 문제(위안부문제)에 비추어서 '성폭력'이 지금 문제되어야 한다는 필리핀 대표의 지적이 새삼 가슴에 강하게 울려옵니다.

태국에 살면서 태국의 인권문제를 취급하던 인도여성의 발언도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성폭력을 낳고 있는 토양으로서 '부권적 사회상황'을 지적한 후, 지금 태국의 마을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던 것입니다. "군사화, 식민지화, 자본화 속에서 여성은 물건화 되어가고 있다. 마을에서 젊은 여성들은 군대를 위해서 차출되고 촌장이 선두에 서서 여성들을 모으고 매춘가에 판다. 마을은 그 여성들의 수입으로 지탱된다"라고

여성들의 성을 토대로 하여 '국가'나 '사회'의 '번영'을 구축해 가려는 사상이나 장치는 여전히 '건제'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것들을 남성들의 정치와 가부장제가 든든히 바쳐주고 있다는 것도...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는 아시아의 이러한 성착취와 '남권, 가부장제사회'의 장치를 선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1회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과거의 청산'에 그치지 않고, 바로 '성폭력의 극치'이며, 원점적 문제임을 강하게 각인했던 회의였다고 생각됩니다.

3. '책임자처벌'이 제기되다-제2회 아시아연대회의

제2회 아시아연대회의는 1993년 10월 21-22일 일본에서 한국, 북조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의 7개국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목할 것은 '책임자처벌'이 한국 정대협으로부터 제기되어 결의문에 들어갔던 일입니다. 정대협이 '책임자처벌'을 제기한 배경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보상을 대신하는 조치'라는 것은 말하자면 '보상은 하지 않는다'는 말로써 또한 보상할 원인

이 되는 범죄사실은 인정하지않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한 반대와 항의의 의사표명과 행동제기가 책임자처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 우리 일본측은 너무나도 반응이 둔했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책임자처벌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안에서도 처음에는 이제와서 왜 책임자처벌인가,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나서는 중인이 없어지지 않는가 라는 반대소리가 우세했습니다.

'위안부'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책임자가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대상이 되고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란, 당시 위안부제도를 기획, 입안하고 이것을 집행하도록 지시명령한 중요한 군인, '위안부'를 폭행 및 협박, 기만으로 모집 연행하는데 큰 역할을 다한 지휘관과 민간업자들, 위안소를 관리운영한 부대 책임자들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해 왔습니다 (주2). 병사에게까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국제적인 수준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불처벌'에 의한 배상책임의 문제입니다. '위안부'범죄에는 당연히 처벌되어야 할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피해자의 인권은 미회복의 상태에 놓여져 왔습니다.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음으로서 권리가 미회복인 피해자에게는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이론이 불처벌에 의한 배상요구론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주목할 점은 정대협은 이 시점에서 일찌기 '위안부'문제가 '전쟁범죄'가기보다는 '돈'의 문제로 바꿔치기 당할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제2회연대회의에서 한국측의 발제를 했던 이미경 정대협 총무(현재 국회의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책임자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적 책임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문제가 강조되어 책임자처벌은 거의 도외시되어 왔다. 그 결과, 강제 중군위안부문제가 전쟁범죄의 성격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주는 '돈'의 문제로 바꿔치기 당하는 경향도 생기고 있다. 따라서 앞

로 책임자처벌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제기된다"("빼앗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2회 강제 '중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보고).

이것은 새삼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해 94년부터는 '돈'의 문제로 바꿔치기 하려는 '민간기금'구상이 나왔으니깐요. 한국측의 문제제기를 이때 조금 더 심각하게 대처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됩니다.

4. 책임자처벌과 '민간기금'구상

1994년5-6월, 전'위안부'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한 '민간기금'구상이 현재화되었습니다. 발기인은 시미즈 스미코(清水澄子-당시 일본사회당(현 사회민주당)참의원), 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도쿄대학교수) 등 8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최근의 저서([민족주의와 gender]에서 우에노씨는 "나는 몇몇 친구들과 이야기 하며 은근히 생존자의 생활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NGO로서 조직할 준비를 해왔다. 너무나도 많은 장애와 곤란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위의 책, p.224 방점은 인용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피해여성을 구제하기 위한 모금의 대상으로 내려다보고 국가범죄 고발자로서의 그녀들의 존재를 왜소화하는 언동 이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국가적 성폭력, 조직적 성폭력, 전쟁범죄였던 '위안부'범죄의 본질을 은폐하고 금전문제로 왜곡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민기금'의 선도적 역할을 시미즈, 우에노 등의 여성이 담당한 것은 같은 일본여성으로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자처벌을 쟁점에서 교묘하게 일탈시키고 '생활지원'을 주요한 쟁점으로 하는 징조는 이미 제2회 아시아연대회의의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시미즈씨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어제 보고에서 한국정대협의 이미경씨가 일본의 운동에 의견을 듣고 싶으면서 던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법적책임을 물을 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강조되어서 책임자처벌은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 그 결과, 강제 '위안부'문제가 전쟁범죄로서의 성격보

다는 피해자에 대한 돈의 보상이라는 문제로 바뀌치기 당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금후 책임자처벌문제가 정말 가능한지 어떤지 토론을 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일본의 상황안에서 어떻게 보다 많은 찬동자를 만들어 가는가라는 운동면에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야 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중략).... 장기적인 문제와 단면문제를 부단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활이 곤란한 '위안부'들의 생활을 어떻게 지원해 나가느냐 하는것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위의 책, p.52 방점은 인용자).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일본에서는 (특히 정치가의 용어로는) "지금은 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책임자처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 '민간기금'구상이 부상하여 왔음에 새삼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민간기금'='국민기금' 반대로 강하게 결속-제3회, 제4회 아시아연대회의.

'민간기금'='국민기금'에는 일부 정부의 출자금에 의한 의료, 복지의 측면이 도중에서 부가되었습니다만 이미 말했듯이 원래 개인배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되어있는 것은 '위안부'범죄는 국가범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안부'범죄라는 것은 천황의 군대, 국가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군의 지도부 뿐만 아니라 내무, 외무등의 각 부서,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 그밖의 정부기관이 총체적으로 행한 국가적, 조직적 범죄, 성폭력입니다. 더 말하자면 이 '위안부'범죄 안에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민족차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민간기금'구상이라는 것은 식민지지배, 점령지지배나 국가적 범죄성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주 되풀이해서 미안합니다만, '민간기금'='국민기금'이라는 것은 '위안부'범죄는 원래 국가범죄가 아니

다, 따라서 국가의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배상, 보상할 일이 아니다, 다만 불쌍하니 일회적인 '일시금' (후에 보상금이라고 칭함)을 지급하자, 그러나 그것도 민간인들이 하게 하자, 말하자면 '선의'로 '불쌍한 할머니들에게 '자선'으로서 주자는 것이 그 본질인 것입니다.

제3회 아시아연대회의(서울 1995. 2. 27 - 3. 1), 제4회 아시아연대회의(마닐라, 1996. 3. 28. - 29)는 이상과 같은 계락을 기도하는 '국민기금'에 반대하여 예상되는 분단, 분할정책에 항거하며 강한 결속을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악질비열한 행위가 피해자나 피해당사국의 지원단체에 연이어 가해졌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국민의 세금을 몰처럼 사용한 그 공작은 그 부도덕성, 범죄성을 폭로당하여(주 3),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정의가 불의'에 이겼고 민중의 힘이 권력을 압도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싶습니다.

6. 우리들의 과제

마지막으로 세가지를 말하고 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남성중심주의, 가부장제사회 안에서 아직 사회적 제재(스티그마)를 두려워하여 '마음의 상처(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은채, 방치당하고 있는 아시아의 많은 '위안부'범죄 피해자(전쟁지역 강간의 피해자도 포함)의 존재입니다. 우리들은 그녀들이 국가범죄의 피해자로서 공적으로 인정받고 그 존엄이 회복되는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위안부'범죄를 삶과 성에 대한 범죄, 착취, 또한 일본제국주의, 천황제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사(史)로, 정대협 공동대표 윤정옥 선생의 말을 빌리면 그 사실을 어떻게 분명히 역사 안에서 정리하고 위치지어 가는가, 여성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세계 근현대사 안에 어떻게 남기고 가는가 하는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전후 40년간, '위안부'문제를 일본사회 내부

에서 여성의 인권문제로 쟁점화하지 못했던 사실을 묻는 일입니다. '책임자처벌'이 나왔을 때, 주저하여 재빠른 대응을 조직화하지 못했던 우리 일본인의 전쟁범죄, 전쟁책임 인식의 존재양식을 묻는 일입니다. 지면관계로 세부에 걸친 보고를 하지 못하지만 이 점에 관한 논점만은 여기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침략과 가해의 인식을 결여시켜온 역사인식과 피해자의식에만 구애받은 전쟁관입니다(=역사인식, 전쟁관의 변혁).

둘째,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의 결여입니다. 일본은 대만을 50년간, 조선반도를 사실상 40년간에 걸쳐 식민지로 지배해왔습니다만, 1952년에 체결한 일화평화조약,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민지 지배, 점령지배의 청산).

세째, 쇼와천황(昭和天皇- 히로히토)의 전쟁책임이 면책된 사실입니다. 히로히토는 그 침략전쟁의 최고책임자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과 일본지배층의 공동공작이라고 할 교묘한 공작으로 천황, 천황제의 전쟁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본인의 전쟁책임인식을 아주 애매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이 전쟁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말하자면 상징적 존재로서 천황이 있습니다. '국민기금' 발기인의 한사람인 오오누마(大沼保昭)씨(도교대학교수)는 천황이든, 그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어린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똑같이 전쟁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주4).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전쟁책임이라는 것은 전쟁책임의 최고 책임자, 즉 오늘날의 경우라면, 일본정부에게 분명한 전쟁책임과 전후책임을 지게하는 것이 시민, 주권자로서의 책임입니다.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본래적으로 전쟁책임에 대한 무게나 성격이 다릅니다. 오오누마씨의 논리는 현대판 '일억총참회'(一億總懺悔)론이라고 할 성질의 것으로, 비계급적, 비파학적입니다(=전쟁책임의 추궁, 책임자처벌)

네째, 섹슈어리티(性)의 문제입니다. '위안부'제도는 국가의 성폭력, 강간시스템인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여성해방주의자(Feminist), 여성학연구자, 여성사연구자들의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매춘이나 섹슈얼 하라스먼트,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등 성폭력에 관심이 깊은 여성들조차도 그러한 경향이 보입니다. '위안부'제도, 범죄는 성차별에 더한 계급차별과 민족차별이 서로 얽히고 있으므로 다각적인 관점과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차별, 계급차별, 민족차별의 구조적 해명).

이상의 과제를 위하여 우리 일본여성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지, 지금이야말로 사상과 실천이 시험대에 올려져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 1] '마에니찌(毎日)신문' 1998년3월19일자 조간은 김대중신정권의 '위안부'문제에 임하는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견요지에서).

"중군위안부문제, 일본정부가 대국답게 솔직히 사죄하고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했었다면 세계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미 해결되었을 것이다. 새정권은 역사의 진실은 명백히 하고 인권문제로서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직접 대책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다. 한국정부가 요구한다기 보다는 일본정부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국민기금의 돈을 피해자가 받느냐 받지않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주 2] 이일에 관해서 이미경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책임자처벌에 대하여

· 질문 - 한국 대표에게, '책임자처벌' 대상자의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론을 듣고 싶다.

· 대답 - (이미경) 어제 말했던 대로, 우리는 이 문제가 전쟁범죄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쟁의 희생자인 병사들의 처벌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천황에 대해서는 미묘한 문제이다. 우리 운동 안에서도 당연히 '천황을 처벌하라는 소리도 있으며, 책임은 천황에게까지 미친다고 믿고 있지만, 방법론으로 기술적으로는 곤란한 점이 있다. 금후 진상규명을 통하여 '천황이 책임자다' 라는 사실이 명백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책임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금후 운동가와 연구자의 협력으로 명명계통을 명백히 함으로서 가능해질 것이다.

책임자처벌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미야자와(宮澤)정권은 지난 8월4일 일본국가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그것을 명백히 해야한다. 우리가 고발을 할 경우, 검찰이 이것을 받을지 여부는 미지수인데 고발하여 일본정부가 책임의 소재와 진상을 명백히 할 의무가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재판으로 누군가를 감옥에 넣는다는 것보다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국제법에서 볼 때 범죄인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으로 '보상을 대체하는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싶다 (앞의 책, "빼앗긴 명예를 다시 찾기위해서" p. 55).

[주 3] 그 일단은 예를 들면 태복시(台北市) 부녀구원사회복지사업기금회(婦援會) 집행장, 하벽진(河碧珍) "자선은 필요없다, 존엄을 달라 - 대만의 전쟁 성노예 생존자의 요구"나, 한국 정대협 김윤옥 공동대표 "국민기금은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가"(용서하지말자 '국민기금' 긴급국제회의(1997년7월27일, 도쿄 학사회관)의 보고집에 수록, 또한 영어판도 있음).

[주 4] 오오누마(大沼保昭) "前 위안부에 대한 보상 네개의 기둥" (요미우리(讀賣)신문 1995. 6. 28. '논점' 제재).

지금까지의 운동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 진상규명과 입법화의 관점에서의 검토 —

니시노 루미코 (西野瑠美子)

(VAWW - Net Japan / 전쟁책임자센터 /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

1. 도쿄회의에서의 VAWW 논의를 축으로

작년 11월, 도쿄에서 개최되었던 "전쟁시, 무력분쟁하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에서는 전쟁시 무력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VAWW=Violence Against Women in War)의 형태나 확대정의 등이 검토되었고, 베이징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에 명시된 [충분한 진상의 규명] [범죄자의 추궁과 고소]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할 행동전략이 논의되었다.

논의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전쟁범죄로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피해와 가해의 기록의 부재와 추궁), 소위 진상규명의 방지와 가해자의 불처벌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국가나 비국가의 집단이 일으킨 온 전쟁이나 내전등에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는 거의 취급되는 일없이 오히려 범죄가 발생했던 일조차 부인되어 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문제로 간주되지 않고 방지되어 온 이유로서는 전쟁이란 본래적으로 부권주의적인 행위이며 강간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의 극단적 표현이며, 이러한 부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는 전쟁이 가지는, 다른 나라나 그 인민을 종속하에 두려는 침략주의적 성질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전시, 무력분쟁하에 되풀이 되어 온 강간, 집단강간등의 성적(sexual and gender)폭력을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로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위안부'문제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요구해 온 운동의 방향과 일치되는 것이었다.

피해여성의 구제가 방지되고 불처벌을 허용해 왔던

것은, 거기에는 범의 침묵, 가해자의 침묵, 국가의 침묵, 공동체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폭력피해자 자신이 입을 열지않는 것은 남성사회의 뿌리깊은 순결이데올로기의 억압에 의한 것이며, 한편으로 가해자 측이 사실을 봉인하려는 압력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증언하려는 목격자에 대해서도 위압적이었다. '위안부'문제에서의 국가책임의 인지와 개인배상에 막는 벽은 진상규명의 불충분함에 기인하고 있다(2, 3에서 상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이나 기록이 필요불가결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 접근으로 일본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모색되어 왔다(4에서 상술).

2. 사실인식을 둘러싼 공방

지금까지 [위안부]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과 정의의 실현을 요구해 왔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여 국회의원이나 학

자, 문화인등의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일부 사람들에 의하여 '위안부는 상행위이다' '강제연행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역사인식과 '위안부'문제의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자들과의 합류를 허용하고, 성차별(sexism)과 민족차별을 노출시킨 민족주의에 매달려서, 극히 정치적인 움직임을 진행시키고 있다. 교과서에 대한 공격은 그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93년의 관방장관 담화에서 강제연행이나 군관여의 사실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지도하려고 하

지않았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을 애매하게 하는 자세가 이러한 국내의 '리비쥬니스트'의 발언을 용인하고 있다.

금년부터 사용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종군위안부가 기술되었으나 도쿄대학 교수 후지오카 노브가즈쓰(岡信勝)대표의 '자유주의연구회'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 및 거기에 찬동하는 보수진영은 기술을 삭제하라는 소리를 강화하며, 전국각지의 지방의회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내고있는 반동적인 운동을 해왔다. 3월의회까지의 상황은 도도부현(都道府縣)의회 수준에서는 30의회에서 삭제청원이 제출되었다. 그중에서 취하, 폐안 등이 된 의회는 13, 계속심 의가 10, 채택취지, 의견서채택이 된 곳은 7이다. 또한 시정촌(市町村)의회 수준에서 삭제청원이 제출된 의회는 339곳에 미친다. 그러나 취하, 부결 등이 256의회, 계속심 의는 44, 의견서채택이나 취지채택은 39이며, 청원이나 진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국민기금으로 조급하게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진상규명이 철저히 되지 않았던데에 원인이 있다. 문서자료의 조사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의 청취조사나 현지조사는 정부와 일본인이 사실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불가결, 불가피한 책임이다.

그러나 각지에서 삭제청원을 막아온 것은 끈질긴 시민운동의 성과이며, 특히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이 운동의 앞장을 서왔다.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발언에 대해서 96년 12월에 여성들은 재빨리 항의 긴급성명을 발표하고, 97년3월에는 '역사는 지울 수 없다, 여성들은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집회를 열고, 그후에 '위안부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러한 성명이나 행동은 전국각지의 여성들에 의하여 확산되었다. 또한 전술한 도쿄 국제회의에서는 세계의 정보교환과 연대를 위한 '전시하 여성에 대한 폭력, 세계여성네트워크'(VAWW-NET)가 생겼고, 일본에서도 'VAWW-NET JAPAN'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일본국내 각지에서 여성들의 운동이 고조되고 한편으로는 일본과 아

시아의 관계 각국의 운동의 연대가 세계의 여성운동의 연대로 확산되어 온 것은 큰 성과였다고 생각한다.

3. 진상규명의구체적 과제

일본정부의 견해는 이미 2회의 조사로 진상규명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조사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아직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서는 남겨진 세가지에 대해서 지적하고싶다.

첫째는, 젠더(gender)관점에 의한 역사의 재조명작업과 교과서기술을 풍부히 하기 위한 노력이다. 예를 들면 남경(南京)학살의 조사, 연구는 진행되고 있으나, 거기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조사는 거의 손도 대지않았다. 도쿄 재판이나 BC급전범재판에서도 아시아부재의 결합이 지적되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 의한 역사의 재조명작업은 서둘러야 한다. 또한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 기술은 되어있으나 사실관계의 기술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젠더의 관점은 약하다. 교과서기술을 포함하여 젊은 사람들이나 후세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계승시켜 나갈까 하는 구체적인 계획등의 제시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위안부'문제의 책임에 대하여 기업의 책임이 전적으로 누락된 점이다. 전술했듯이 '위안부'문제의 사실관계나 국가책임을 부인하는 움직임 속에서 기업인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행동해왔고, '위안부'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다. '위안부'문제를 본인의 기억에서 제거해 버리려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의 기업인 찬동자는, 가시마(鹿島)건설, 오오바야시구미(大林組), 미즈비시(三菱)중공업, 스미도모(住友)금속, 토오시바(東芝), 후지쯔우(富士通), 닛쇼이와이(日商岩井), 아지노모토(味元), 라이언, 일본 쉐터키 후라이치킨, 데이진(帝人), 동방레이온, 기노구니(紀之國)식품, 도쿄(東京), 히가시니폰(東日本) 하우스, 스미도모(住友)은행, 요코하마(横浜)은행, 히로시마(廣島)은행, 스미도모해상화재보험.....등등 50을 넘는 기업이 이름을 내고 있다. 이중에서 히가시

지금까지의 운동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

닛폰하우스는 15억엔을 내어 도쿄 재판에서 A급전범이 되어 처형된 도조히데기(東條英機)를 찬미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그 공개를 눈 앞에 두고있다. 또한 여기에는 가고시마건설등 강제연행에 관여했던 기업이나 산업위안소를 만들고 있던 기업등의 이름도 있어서, 바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역사의 부인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전시하에서 기업도 일본국과 아시아 각지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있었다. 1943년 노동과학연구소에 의한 '반도노동자 근로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에는 규슈(九州)에서 홋카이도(北海島)까지의 각지의 사업소(광산, 토건, 공장등등) 37개사의 조사보고가 정리되어 있다. '성적 해결책으로서 반도명주옥(半島銘酒屋)을 지정'하고 건물을 무상대여하여 조선인 여성을 고용하고 있던 사실이나, 여성들의 검진은 탄광의무국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었던 일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1940년에 육군성 정비국 전비(戰備)과장이 북해도탄광 기선(汽船)주식회사에 보낸 '모집관계 잡기(노무과)에는 후생시설로서 성적 욕망을 고려하여 '조선인, 중국인 창부의 유치'가 있다. 노무과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징집은 관헌의 협력하에 행해졌다. 징집은 기업과 계약이 있었던 업자가 모은 경우, 관헌의 협력에 의한 징집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규슈의 치구호오(筑豊)에는 후루가와미네(古河峰)광산, 호오슈(豊州)탄광등에 조선인'위안부'가 있었던 사업장이 적어도 10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어느 탄광 노무계의 '여자정신대로서 데려왔다'고 하는 증언(요미우리신문 1992.2.21부)도 나오고 있다.

세제는 [위안부]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예를 들면 '위안부'의 도항증명서를 발행하던 경찰관계 자료나 구탁무성(舊拓務省), 내무성이 가지고 있던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관계 자료, 나아가서 업무일지, 종군일지나 외무성, 법무성의 BC급 전범관계자료, 후생성사회, 원호국 소장자료등은 거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민간조사에서는 싱가포르의 위안소와 거기에 있던 여성의 조사가 행해지

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부의 인식에 전혀 없다. 이것은 관계국에 조사협력을 요청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진상규명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입법화에 의한 진상규명과 앞으로의 운동

1996년 6월 13일,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조사회 설치법'(이하 모도오가(本岡)안)이 모도오가 쇼지, 사사노 사다고 참의원의 발의로 참의원에 수리되었다. 26명의 찬동위원을 얻은 발의였으나 기한이 넘어서 심의가 안된채 폐안이 되었다. 그후에 '위안부'문제의 입법해결을 요구하는 회가 발족했고 한국이나 대만의 국회의원, 피해자, 지원단체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원내집회 등 정력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입법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기운이 높아지는 가운데 모도오가 법안을 축으로 다나카 코오(田中 甲)중의원이 '위안부'와 731부대, 강제연행을 포함한 '항구평화조사회 설치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발의하는 직전까지 왔으나, 유감스럽게도 제출되지 못했다. 정치세력의 역학관계가 영향을 주었던 것은 시민운동에 대한 반성을 가져왔다. 소위 시민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될 것은 매스컴의 행태이다. 교과서논쟁이 분출했을 때 매스컴은 모두가 '위안부'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유엔인권위원회의 움직임이나 세계여성회의의 움직임 등은 물론, 입법요구운동에 대해서 매스컴은 거의 보도를 하지않는다. 매스컴대책은 여론환기를 위해서도 필요불가결이다.

또 하나는 국회의원대책이다. 지난 수년간, 시민과 연대하여 움직여 온 의원은 모도오카의원을 비롯하여 수명의 의원뿐이다. 많은 의원들은 표와 결부되는 행동에는 민감해도, 전후보상문제에는 비겁하거나 회피적이다. 진상규명이나 배상의 의사가 있는 의원은 결코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다. 의원을 적극적으로 움

직여 나가는 운동도 필요하다.

현재, 시민의 손으로 몇개의 입법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먼저 법안 상정에 실패하였던 '전시 성적 강제피해자 문제 설치법안'이 다수의 소개의원(紹介議員)을 모집하는데 성공하여, 여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국회에 발의하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 하나는 '전쟁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회 설치'를 위한 법률과 '종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금 지급을 위한 법률'의 조기제정에 대한 청원운동이며, 또 하나는 '전쟁피해조사회법'을 실현하는 시민회의의 청원운동이다. 두번째 법안과 세번째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회 설치법의 내용은 '항구평화조사회법'을 기본으로 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현재 일본국내에서는 이들 입법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발언자가 관계하는 '전쟁조사회법(가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하고 싶다.

여기서 구상하는 공적조사회란, 1)국가의 예산과 기관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2)아시아제국 및 관계 각국 정부기관의 협력도 얻으면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3)일본정부의 정부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자료를 제출시켜서 피해와 가해의 전체상을 조사하고, 4)그 조사결과를 국가의 공적인 것으로 하고, 국민의 공유물로 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민간이 아니라 공적인 조사기관이 중요한 것은 조사결과가 일본의 공적인 인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방의회나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으로 역할하여, 초당과 국회의원의 찬성을 얻어 의원입법으로서 성립시키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선 진상규명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번, 국회제출에 늦었던 것은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잘되지 않았던 점에 있으며, 이번에는 같은 궤를 밟지말도록 전쟁피해 조사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입법운동을 시민의 소리로 국회에 내걸려고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일본

전국에 지국을 설치하여 각기 지역에서 독자적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3만명이 서명하였다. 나아가서 지방의회에서는 '전쟁피해조사회'의 설치를 국가에게 요구하는 의견서'채택운동이 시작되어 있으며, 후쿠오카(福岡)의 시민운동이 호기마치(方城町)의회에 '전쟁피해 조사회'의 설치를 국가에 요구하는 의회결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의된 폐거를 얻은 바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움직임을 전국각지에서 확산할 예정이다. 나아가서 병행하여 전국각지의 시민양케트를 기초로 법안의 검토도 진행했다. 시민의 소리를 반영한 입법실현을 향하여, 다른 단체와도 연대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자료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본국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국이나 구연합국에도 자료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들 조사에 대해서는 각국의 운동과의 연대 없이는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 자료조사에서도 아시아의 연대하는 행동을 호소하고 싶다.

5. 국민기금의 현 상황

지난 3월 31일 한 유명신문 조간에 국민기금이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년도말에 예산을 다 써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기금의 예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 특히 국가거출의 면에 대해서는 알기 힘들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금관계 예산에 대한 개요를 보고 하고 싶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에 대한 정부거출은 두개의 경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총리부로부터 여성아시아평화우호활동이나 공보사업비보조금(홍보비용)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외무성으로부터 의료, 복지사업비(당초 '유엔여성관계거출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산된)의 지출이다. 물론 피해여성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상금' 200만엔은 일체 정부거출과 무관하다.

1997년 여기에 대한 외무성 예산은 1억9018만엔이었다. 그 내역은 의료, 복지사업비가 한국, 대만, 필

리핀에 대해서 300명으로 계산된 42200만엔. 나머지의 1억4700만엔은 인도네시아, 네델란드, 중국에 대한 것으로서 이중 3800만엔은 97년3월에 일본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사이에 고령자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각서의 조인이 행해져, 첫해에 송금되었다. 인도네시아와는 10년계획으로 함께 3억8000만엔을 예정하고 있고, 개인배상의 길을 굳게 닫고 있다.

나머지 1억900만엔은 중국과 네델란드에 대한 예산이었으나, 중국정부는 개인배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 형식이 모색되는 것 같다. 또한 네델란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직접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금년도 예산인데, 총리부와 외무성의 합계로 약4억8000만엔이 편성되고 있다. 이중에 외무성예산은 약8067만8000엔이며, 이것만으로 보면 의료, 복지사업비는 작년도 보다 삭감되었으나, 이것은 현단계에서 미래가 확실치 않는 중국과 네델란드에 대한 예산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섭에 따라서는 보충예산이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산측면에서 보아도 국내외에서 국가에 의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기금에 의한 해결을 강행할 자세를 견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론형성에 대해 한마디 하고싶다. 전술했듯이 일본에서는 '위안부'기술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론형성을 하고 있다. 그들은 두권의 교과서를 포함하여 7권의 출판물 서두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에 교과서의 파이롯드판(版)이 있다. 내년 3월을 목표로 출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미 1만부의 예약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 파이롯드판의 목적은 그들이 만드는 역사교과서 ('위안부'문제를 한줄도 놓지않는 것)를 각지의 교육위원회에 채택되도록 하기위해서 여론을 강하게 만드는데 있다고 한다.

1997년 5월 22일, 미국의 국회의원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앞으로 제2차대전에서 '위안부'나 포로등에 관련한 자료를 외국의 연구자에게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 국가에서의 운동에서도 취해야 할 것이 아닐까?

시민은 입법화운동 뿐만 아니라 '나눔의집' 상영운동이나 '할머니의 그림전시회', 집회, 학습회 등, 다양한 모양으로 일본사회에서 운동을 해왔다. 앞으로는 아시아 각국의 연대는 물론, 세계여성들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가 과제일 것이다.

금년은 유엔인권선언 50주년의 해이다. 세계의 연대운동을 만들어갈 최적의 해이다. 도쿄회의에서는 일본의 '위안부'문제 워킹그룹의 김부자씨가 [1 year 1 issue], 즉 여성들이 각기의 과제를 호소할 때에 여성들의 연대의 증거로서 1년에 하나의 캠페인을 세계공동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했다. 금년은 인권선언 50주년을 마지하여 '1 year 1 issue'로서 '위안부' 문제해결의 대캠페인을 제기하여 회의에서 결의하였다.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이번의 아시아회의에서 재삼 확인하고 앞으로의 유기적인 연대행동을 살려가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제5회아시아연대회의의 개최, 준비에 힘써주신 한국의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감사드립니다. 이 회의가 앞으로의 운동의 효과적인 단계가 될 것을 바란다.

'여성의 인권' 국제운동에서 본 '위안부'운동의 평가와 행동제안

마쓰이 야요리 (아시아여성자료센터)

- '위안부'에게 명예와 정의를! 지구적 캠페인 2000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일본군성노예제) 국제재판(법정)을 여성들의 손으로.'

1. 국경을 초월한 '위안부' 문제 4분의 1세기

1) 기생관광반대운동과 '위안부' 문제

위안부문제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은 1973년 한국교회여성들이 일으킨 기생관광반대운동에 일본여성여성으로 호응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한국여성들이 일본남성의 성노예가 되고있다"며 과거 일본군이 조선여성을 '여자정신대'로서 강제연행했던 만행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우리는 '기생관광에 반대하는 여자들의 회'를 결성하여 하네다공항에서 일본남성들에게 항의 비라를 살포했습니다. 비라에는 '수치를 알아라, 매춘 목적의 관광단!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많은 딸들을 중군위안부로 강제연행하고는, 같은 땅에 집단으로 돈을 가지고 여성들을 육보이러 가고있다. 남편이나 애인, 형제나 동료들을 한국으로 매춘여행하러 보내지 말라'라고 썼습니다. 이 하네다공항의 데모에서는 경찰에 연행된 여성도 있었습니다만 권력은 두 나라 여성의 연대의 싹을 잘라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는 중군위안부에 대해 학습했지만 당시에 운동을 만들지 못했던 것을 새삼스럽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독재정권하에서 여성들이 민주화투쟁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이 문제를 다룰 여유가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나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 태국, 하자이에 살고있는 할머니

'위안부'문제는 그후에도 나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신문 싱가포르 특파원을 지냈던 1984년

태국 남부 하자이에서 살고있던 노수복할머니를 인터뷰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서울 중앙일보에 게재되었던 '원한의 일대기 - 나는 여자정신대였다'라는 연재 기사를 보고 방문했는데 거기에 기록되었던 지옥과 같은 노예생활과 40년의 타향살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쟁범죄 행위를 반성도 하지않고 있는 일본에서 온 나에게, 할머니는 실로 따뜻한 용서의 말을 주셨습니다. 모국어도 잊고 있는데 겨우 생각했던 일본어 단어들로 "병사들 나빴다. 이제는 죽었다. 한국사람, 일본사람, 태국사람, 중국사람, 친구"라고 중얼거리며 기도하듯이 두 손을 모은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아시아신문에 할머니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잡지나 책이나 강연등에서 기회가 되는데로 전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삶의 태도, 인간상에 깊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후에도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졌던 것도 그 할머니의 용서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3) 윤정옥 선생의 조사와 한국여성단체의 분기(憤起)

4년후인 1988년, '위안부'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방문한 윤정옥 선생을 도쿄에서 만났고, "일본군에게 연행된 동년배의 같은 민족인 여성의 문제를 역사의 어둠속에 파묻어 두는 것은 그녀들을 두번 죽이는 것입니다. 정년퇴직후의 여생을 모두 이 문제에 바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열정에 감동받고 진심으로 협력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조사여행의 결과를 윤선생님이 1990년초에 한겨레신문에 자세하게 연재하셨고 '위안부'문제가 역사

'위안부' 운동의 평가와 행동제한

의 어둠속에서 밝혀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 후, 한국의 여성운동단체가 위안부문제로 일본정부에게 6항목(진상규명, 공식사죄, 국가배상, 책임자처벌, 교과서에 기록, 기념사업)의 요구를 하였고 이 문제를 위한 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91년 여름,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증언에 나서자 피해자들이 줄을 이어 반세기동안의 침묵을 깬습니다. 민주화운동 안에서 힘을 기르고 새로운 여성해방주의 사상을 가진 한국의 여성운동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소리를 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4) 아시아 각국에 운동이 확산되다

이리하여 한국에서 시작이 된 운동은 다른 아시아의 피해국에 재빨리 확산되었습니다. 90년말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여성 인신매매문제 회의'에서 한국대표가 '위안부'문제를 호소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이 이 문제에 처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여성운동이 조직되었던 필리핀에서는 운동목표가 정해지고 92년에 마리아 로사 웬슨씨가 이름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92년 가을에 북조선의 수도 평양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엄에 참가했던 한국, 일본의 여성들 앞에 할머니들이 모습을 나타내고 고통의 체험을 말했습니다. 한국여성들과 굳게 약속하는 광경은 민족분단을 초월한 남북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전해오던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위안부'의 만남은 93년6월 비엔나의 세계인권대회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 법정'이라는 NGO집회에서 1000명의 참가자를 앞에 놓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폭력의 피해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증언대에 선 김복동할머니의 비통한 체험담은 아시아의 '위안부'문제를 비로소 널리 세계에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위안부'문제 심포지엄도 열려서 김복동할머니와 나란히 앉았던 북조선의 위안부 장수월할머니가 통곡을 하면서 증언하여,

통역하던 여성도 눈물을 닦을 정도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후리아 폴라스씨가 참가, 일본 식민지 지배하의 한국과는 조금 다른 일본군 점령하의 '위안부' 체험을 말해서 위안부문제의 폭과 다양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국제연대활동의 경험이 풍부한 필리핀의 여성운동은 그 후에도 위안부문제를 국제화하는데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5)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와 여성에 대한 폭력

비엔나 세계인권회의가 채택한 '비엔나 선언'에 국제적인 여성운동의 캠페인의 성과로 '여성의 인권'이 명기되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 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력분쟁하의 여성의 인권침해에 '위안부'제도가 '성적노예제'로 포함되었습니다. 국제인권문서에 이렇게 명쾌하게 기록된 것은 한국, 필리핀 그리고 일본 등 각국에서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운동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국제적인 캠페인의 성과였습니다.

비엔나 회의에서 여성들이 획득한 또 하나의 구체적인 성과는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 보고관을 임명한 일이었습니다. 초대 보고관에 스리랑카 여성 라디카 쿠마라스와미변호사가 임명되었는데, 활동적인 페미니스트로서 '위안부'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후에 중요한 권고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위안부'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얻게 되었고, 대만, 중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네델란드에서도 피해여성들이 줄지어 나와 지원운동도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말레이시아, 버마, 캄보디아, 태평양제국, 영국 등지에서도 '위안부'의 존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필리핀, 중국, 재일, 네델란드의 피해자로부터 일본정부를 상대로 6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되어 각기 재판에서 지원연대활동이 행해졌습니다.

6) '여성의 인권' 아시아 법정에서 다른 성폭력 문제와 관련짓다

어떠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피해여성은 침묵을 강요당해 왔지만 '위안부'들은 다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용기를 주어서 침묵을 깨는 힘이 되었습니다. 1994년 도쿄에서 필리핀과 일본의 여성단체 협력하에 개최된 '여성의 인권 아시아 법정'에서는 현대의 인신매매, 일본군성노예제(위안부), 미군기지, 유엔 PKO의 성폭력이라는 아시아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가지의 성폭력을 하나로 연계하여 고발했습니다. 이 법정은 90년 서울에서 인신매매 문제회의에서 제안되었고, 도쿄가 개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몇만명의 태국등의 젊은 여성들이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지역, 나아가서 서구의 성산업에 인신매매조직으로 보내져서, 감금, 협박, 폭력 아래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대의 성노예제의 비참한 실태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키나와나 한국의 미군기지 주변의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강간이나 강제매춘등 군대에 의한 성폭력, 그리고 평화유지의 이름아래 캄보디아에 들어간 유엔 PKO군이 낳은 대규모적인 매춘산업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증언은 한국, 필리핀, 재일의 '위안부' 출신의 증언과 함께 이들 세 종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 모두 여성의 인권침해의 극치임을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법정에서 앞서서 '성폭력희생자 추도의 밤'이 행해졌고, '위안부'로서 극한의 시베리아로부터 고열의 태평양 섬들까지 연행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여성들, 그리고 변영의 일본에 인신매매당한 후, 죽음을 당하던지, 자살한 여성들에게 아시아 각국의 참가자들은 흰 꽃을 헌정하고 촛불을 손에 도쿄의 밤의 변화를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하여 함께 투쟁하자는 의사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법정에서 채택되었던 '도쿄 선언'에서 '우리 아시아 여성은 일본에 의한 위안부제도를 전쟁범죄, 군대성노예제의 행위로 인정하고 이러한 전쟁범죄인을 기소, 처벌할 책임을 일본국가에게 부과한다'라고 했고, 또한 기지매춘을 전후에도 지속되는 군대성노예제로 정의하며 군사기지의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선언

은 전시, 평화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투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힘있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말할 용기를 가진 모든 여성을 축복한다"

하나 하나가 기적의 생존자이다

모든 증언이 진실의 승리이다

모든 진실은 말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비난이다

그것은 전시의 여성에 대한 범죄이다

평화시의 여성에 대한 전쟁이라는 범죄이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이름을 지적하며 비난한다

우리는 저항한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7) 베이징 세계여성회의에서 군대성노예제를 전쟁범죄로 명기

아시아 법정은 95년 유엔 세계여성회의(베이징)를 위한 과정이었는데, 세계 각지에서 지역분쟁이 일어나고 구 유고의 내전에서는 2만명의 여성이, 르완다의 내전에서는 1만5천명의 여성이 강간당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베이징 회의에서는 최대의 초점이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을 없애려고 세계의 여성들이 검은 옷을 입고 데모를 했습니다. 각국의 여성들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유고나 루완다 등 현대의 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항의와 함께 과거의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제에 대한 항의의 프라카드도 보였습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 아시아 연대에서 국제적 연대로 여성들의 행동은 확산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의 지구화를 배경으로 베이징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은 '여성의 인권의 중대한 침해가 특히 무력분쟁시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무력분쟁시의 강간행위는 전쟁범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에 대한 죄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나 국제기관이 취해야 할 전략으로서 '무력분쟁하의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전시중에 행해진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 특히 조직적 강간,

강제매춘, 성노예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규명을 행하고,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에 책임있는 모든 범죄자를 고소하고 피해자여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노예제를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로 간주하고 진상규명, 책임자의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위안부문제해결에 있어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부터 동아시아의 여성들이 시작했던 '위안부'운동이 지구화되고 겨우 5년만에 여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8) 아시아국민기금과 '자유주의사관'파에 의한 '위안부'공격

전후 바로 반세기가 되는 95년은 각국에서의 피해자나 지원자에 의한 '위안부'운동의 고양, 아시아여성 연대회의 등으로 상징되는 아시아여성들의 국경을 넘은 힘의 결집,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국제여론의 압력 등, 역사의 큰 파도를 다시 되돌려 보려는 움직임이 나왔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정부는 당초 위안부제도에 대한 군, 즉 국가의 관여를 부인하고, 구 일본군의 자료가 발견되자, 전후 보상문제는 2국조약으로 이미 해결이 끝났다고 주장하여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으로 정부수뇌가 사죄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요구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자 95년에 민간으로부터 모금하여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아시아국민기금(국민기금)을 설치하여 넘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책임에 기초한 국가배상을 하지않기 위한 조치이며, 명예와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대부분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정부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국민기금을 추진하려고 했고, 피해자나 지원단체 안에 분열이나 불신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경제상황에서 일부 피해자는 기금을 받았지만, 돈으로는 빼앗긴 존엄을 회복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한 대만이나 한국정부는 선지불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식민지배나 전쟁책임을 부인하려는 우익적 세력이 전후에 연면히 존재해 왔고, 90년대가 되자 일본역사의 책임을 묻는 것을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비난하는 '자유주의사관'파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익세력이 생겼습니다. '위안부'운동이 높아지자 위기감을 가진 그들은 전후 50년을 기하여 '위안부'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연행이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다' 등, 대학교수나 저널리스트나 인기만화가 등이 '위안부' 모욕캠페인을 전개하여 역사를 바로 배우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무시못할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위안부'문제를 기술하는 현재의 교과서는 자학적으로 거기에 대체되는 새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2001년부터 중학교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나라를 성범죄국가라고 교과서에 기록하여 세계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일본군대의 성범죄는 세계의 군대 안에서 제일 적은데, 일본만이 성범죄를 했다고 편견을 쓰고있다'고 편집인의 한 사람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사관'은 지구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으로서 세계각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소위 역사수정주의나 배타주의, 자기민족중심의 왜곡된 민족주의의 일본적인 형태로, 그들의 '위안부'공격은 식민지, 전쟁책임 부인론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측면은 '반인권' '반여성' '일본고유의 전통존중'이라는 가부장제 긍정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국주의적(一國主義的)인 대응으로는 불충분하며 바로 국제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사상과 행동의 폭력성을 폭로하고 상대화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침여하게 대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여성들이며, '위안부'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지 말라'고, 97년 3월 도쿄에서 '여성들의 반론집회'를 개최한다든지, 일본각지의 지방의회에서 그들의 삭제요구 청원을 지지하는 행동을 취하는 등 여성들이 분투하고 있는 것

입니다.

9)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 불처벌을 문제삼다.

쿠마라스와미 유엔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은 96년 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위안부'제도를 군사적 성노예제라고 정의내리고 국제법 위반임으로 일본정부에게 법적책임이 있다고 규정했고, '국민기금'은 그것을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쿠마라스와미 보고관은 98년 봄 유엔인권위원회에 '전쟁, 무력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폭력'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97년 가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국제회의를 도쿄에서 열고, '위안부'문제를 안고있는 아시아제국 뿐만 아니라, 구 유고나 아프리카를 포함하여 20개국 40명이 참가하여 세계각지의 분쟁에서의 성폭력의 처참한 실태를 서로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이 왜 지금까지 심판받지 않았는지 토론했습니다. 불처벌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었습니다. '위안부'제도나 남경에서의 집단강간 등 일본군의 성폭력이 전후 도쿄 재판이나 각지의 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군이 증거인멸한 원인도 있지만 증거문서가 제출되어도 거의 제소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을 했던 서구의 식민지 종주국은 포로 등 자국민에 대한 전쟁범죄를 문제로 삼았고, 지배했던 아시아 사람들의 피해에는 무관심이었다는 인종차별, 식민지주의, 그리고 재판관은 남성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이해가 없었다는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다시금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책임추궁하기 위해서 각국의 여성들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여해 온 아시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마음든든한 국제회의의 성과였습니다.

2. '위안부' 운동의 평가와 국제적 공헌

90년대의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아시아여성의 운동의 성과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싶습니다.

- 1) 일본의 전쟁책임, 전후배상문제에 여성의 인권의 관점, gender의 관점을 넣은 일.
- 2) 나서서 증언했던 '위안부'의 용기가 방그라데시, 구유고, 르완다 등 타국의 내전이나 분쟁에서의 성폭력 피해자가 침묵을 깨도록 격려한 일.
- 3)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관점을 국제적으로 확립하는데 기여한 일.
- 4) 지금까지의 군사재판을 여성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조명할 여건을 만들고 앞으로의 전쟁범죄를 재판하기 위해서 98년에 설립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성폭력을 넣도록 국제여론을 만든 일.
- 5) 전쟁시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평상시의 일상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나타내고, 여성의 인권침해의 핵심으로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투쟁하는 국제여성운동에 공헌한 일.
- 6) 군대가 가지는 폭력성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명백히 하고 폭력장치로서의 군대의 존재 그 자체를 문제삼아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대안사회에 대한 희망을 강화한 일.
- 7) 국경을 넘은 연대활동을 통하여 경제의 지구화에 대항하는 21세기의 글로벌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나타낸 일.

3. 행동제안

'위안부'에게 명예와 정의를! 글로벌 캠페인 2000

'위안부'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90년에 일본정부에 보낸 6항목 요구와 베이징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의 3항목이 목표가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불충분했던 것이 가해자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없이 피해여성들이 요구하는 명예와 정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97년에 돌아가신 강덕경할머니가 "최고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그런 그림이 피해자의 절실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20세기가 끝나가는 이때, 그 폭력의 가장 아픈 피해자의 유지를 분명히 세우는 일 없이 폭력이 없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자를 재판하지 않았던 전쟁 재판을 다시 하기위해서 여성의 힘으로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성노예제) 국제재판(법정)]을 20세기 최후의 해인 2000년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 전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 후에 발족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네트워크(VAWW NET)에도 협력을 제안합니다.

일본군관계, 군사재판관계의 자료를 철저히 제조 사하기 위해서는 일본, 아시아만이 아니라 구연합국도 포함하여 세계안에 보존되고 있는 파일을 발굴할 필요가 있기때문입니다.

지금부터 2년8개월의 기간 안에 세계각국의 여성들이 협력하여 '위안부'제도에 책임이 있는 일본군인이나 정부관계자의 구체적인 이름이나 사실관계등의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국제법학자나 역사학자 등 세계의 전문가에게도 협력을 요청하여 재판을 열고, 그것을 역사적 문서로서 남기는 것입니다. 이 '위안부' 국제법정을 메인 이벤트로 하여 2000년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캠페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기록화(documentation)운동 - 각국의 피해자 증언을 모아서 국제적인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로서 편찬한다(각국어로 번역)
2. 편지캠페인 할머니나 로라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각국에서 모집하여 출판한다.
3. '위안부'를 테마로 한 예술 이벤트- 그림, 비디오, 영화, 연극, 무용, 노래, 음악, 시, 문 학 등의 제작을 각국에서 추진하여 2000년에 어떤 모양으로든 발표하는 장을 만든다.

4월 16일 오후

일본측 발제에 대한 질의, 응답

▶ 보충발언 : 부산의 할머니들이 관부연락선으로 시모노세키에 끌려간 일을 가지고 1992년 일본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나눔의 집에 있는 박두리 씨를 비롯한 전 '위안부' 3명과 시즈오카에 근로동원된 사람까지 총 10명이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제소를 하였으며 4월에 판결을 받게 된다. 재판과정에서 200번 이상의 변론이 있었고, 4월 27일 판결이 있는데, 벌금상의 징점등을 기록한 자료를 200엔에 판매하고 있다. 이 판결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것으로, 일본의 115단체의 서명과 한국 정대협 300회 수요집회시 715명의 개인서명을 받았다. '위안부'에 관련된 판결로는 처음이며 일본사회의 정의를 촉구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다.

니시노 루미코 씨의 발언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후쿠오카에서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삭제 청원운동이 있었다. 운동단체들이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그 결과 후쿠오카 당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률전문가 20인을 위시하여 시민 3만명이 반대서명운동에 참여하였다. 다가와군의 호조마찌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있는 일이었으며, 의회에서도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지 말라는 청원운동이 있었다.

▶ 보충발언 : 필리핀의 원고 66명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7-9월에 제1심 판결이 나온다. 이들은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합법적인 근거로 헤이그 조약 3조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군정부의 책임 추궁과 보상을 촉구하였다. 또한 개인에게 청구권이 있다는 법근거에 따라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청원운동, 국제적인 서명운동을 하여 제네바 인

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다.

▶ 질문 : 필리핀에서는 일본의 국민기금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 답변 : 필리핀 단체 말라야 로라스는 진상규명과 피해지에서의 본인에 대한 자료보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국민기금측이 올해 두 번 필리핀에 와서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 먼저 의료복지기금을 필리핀 정부를 통해서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국가배상과 같은 것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두번 째 방문하면서 필리핀 피해자들이 하시모토 수상의 편지를 거절한 것에 대해 일본 수상을 모욕한 것이라고 강하게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 할머니들은 편지 한 장 반환한 것이 모욕이라면, 과거에 우리가 당했던 일은 무엇이나며 항의하였다. 이에 일본의 국민기금측은 편지와 의료기금은 한 셋트라며 하나라도 거부하면 모두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거부할 때 돈도 반환하라고 주장하였다.

▶ 보충발언 : 이번에 북한쪽이 불참한 것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제 여성의 힘으로 남북이 만나야 하고, 세계여성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해결과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과 더불어 일본과 한국의 미군기지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회의가 되길 기원한다.

▶ 보충발언 : 오카야마 위안부를 생각하는 여성모임은 1997년 6월에 발족하여, 7월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은 이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오카야마 현은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서술을 삭제했다.

이 문제에 대해 분개했고 동시에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하여 이 모임이 해산되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감사한다. 교과서 삭제는 민법에도 위배된다.

▶ **보충발언**: '여성·전쟁·인권 학회'는 지난 번에 발족한 소규모 학회로 채 결성한 지 1년이 안된다. 제 2회 심포지엄을 6월 오오사카에서 개최하는데 주제를 "전쟁과 여성"으로 잡았다. 우리 모임을 위해 변호사인 스노다 유키코씨와 가즈이 씨 등 戰後 역사책을 서술하신 많은 분들이 있다. 우리 학회는 현재 일본의 현황을 진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정신대 연구소 제안으로 우리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에 배포하고 있으며, 작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 **보충발언**: '나눔의 집 기념관을 지원하는 동경사무소'는 정말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할머니들의 식민지 경험과 전쟁, 성폭력이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모임이다. 사무국에 15명의 실무자들이 있으며, 60명의 발기인들과 300명의 회원이 있다. 작년 일본에서 "나눔의 집 할머니"라는 책을 출간하였으며 전화가 쇄도할 정도로 많은 호응이 있었다. 이것으로 인해 약 백만 엔 정도를 기념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토론

사회: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 **사회자**: 지금부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의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①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사료관 건립과 역사기록에도 힘을 기울인다.

② 일본정부에 대해 1996년에 유엔여성폭력특별보고관인 쿠마라스와미의 권고를 이행하고 법적 책임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③ ILO에 이 문제를 상정하도록 하는 운동, 국제형사재판소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를 포함하도록 하는 운동과 아시아 지역에 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국제운동을 전개한다.

④ 아시아 피해국들을 포함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일본전범의 출입국 반대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

⑤ 이러한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시아 각국과 세계의 여러 여성 시민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사회자**: 제시된 5개항의 토의제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선생님 말씀해주시시오.

* **이효재**: 책임자 처벌은 오래전부터 구호로서 외쳐온 사항입니다. 문제는 일본측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자 처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은 또 구호로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전쟁범죄자 명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단이 확보되면 책임자 처

벌문제는 자연스럽게 내세워지게 됩니다. 일본측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쓰이 야요리씨가 말한 국제여성전범재판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단확보와 2000년 국제여성전범재판을 통해 우리 운동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이효재 선생님은 책임자 처벌 문제에 있어서 일본측에 좀 더 구체적인 활동이 있으면 하시는데 마쓰이 야요리 선생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마쓰이 야요리**: 2000년 여성에 의한 전범재판에 대해서 갑자기 제 개인이 제안한 인상을 주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회의에서 만들어진 바우넷트 제펜(VAWW-Net Japan)이라는 여성들의 그룹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 여성들이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누가 책임자인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조사활동, 진상규명 활동의 하나로서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각나라, 즉 옛날 연합국들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등에 있는 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누가 책임자였는가를 한사람이라도 이름을 더 모아서 모은 결과를 법정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즉, 전범입국 금지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책임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의 이름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범입국 금지운동과 더불어서 누가 책임자였는가를 알아내는 진상규명활동을 발표하는 자리로서 이와같은 법정을 열자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재판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재판입니다. 우리가 묻고 싶

은 것은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적인 재판으로 이뤄질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 손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정대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료관에 남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처음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에서도 의논을 하고, 다른 분들과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책임자 처벌운동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 사회자 : 이것은 설명을 들으니까 ①번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 사료관에 관한 구체적인 안인 것 같습니다. 스즈끼 유우코 선생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이용수 할머니 : 이번에 피스보트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당시 일본군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폭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본정부는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책임자를 밝혀내야만 합니다.

* 사회자 : 그렇습니다. 책임자를 찾아내어 명단을 제시하지는 것이 마쯔이 야요리선생의 의견입니다.

* 스즈끼 유우코 : 어제 제가 발제속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민기금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번에 같이 넣어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 의무성 관료로서 한국인들에 대한 정치운동을 했던 하라 분베이가 국민기금의 이사장입니다. 옛날 식민지 시대에 엘리트 관료였던 사람이 국민기금의 이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는 패전 직전에 내무성의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 불태울 것을 전국에 몰래 다니면서 지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두머리로 있는 국민기금에 대해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하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 2000년 프로그램의 경우도 굉장히 훌륭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만,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의가 집

약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2000년에 모든 행동을 집약해 나아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회자 :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하자는 것을 ①번의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안에 넣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동의하는 박수)

* 스즈끼 유우코 :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의견을 넣고 싶습니다.

* 사회자 : 이 의견이 좋습니까? (동의하는 박수)

* 사회자 : 일본 참가자 여러분이 한국측 지은희 선생 발제 중 6항에 대해 문제제기(국민기금측에 대한 사항)를 많이 했는데 그 의견을 반영하여 발제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동의하는 박수) 그러면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미경 : 여기보면 우리 결의를 네가지로 얘기했고, 맨 마지막에 2000년 행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데 전체적으로 결의문 초안이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재구성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UN인권위원회가 결의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라고 하는것이 가장 큰 이슈이므로 계속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이번에 중요하게 지적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고 명시하고 구체적으로 네가지 정도의 행동을 제안합니다.

- 1) 위안부 관련 범죄자 명단을 발굴한다.
- 2) 아시아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일본 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
- 3)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한다.

4) 2000년에 개최가 제안되었던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노력한다.

세번째, 국민기금을 해산하고 일본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네번째,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위와 같이 정리한 다음, 우리의 결의를 다짐하는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자 :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명확하지요? 첫째는 UN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두번째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하는데 거기에 네가지를 명시해서 범죄자 리스트 발굴, 일본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 제정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2000년 국제여성전범법정 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세번째는 일본정부에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진상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국민기금을 해산하라는 요구를 하고, 네번째는 일본 특별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촉구를 하고 이렇게 네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한 다음, 결론으로 이와같은 결의를 피해자들과 우리 운동단체들이 다시 다짐하면서 그동안 8년동안의 운동을 정리하고 2000년을 향해 대행진을 시작하겠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이미경 의원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칠까요? (동의하는 박수) 네, 좋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이 이제 다되었습니다. 서기부가 읽어주십시오.

* 결의문 채택 (우뢰와 같은 박수)

제5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의 공동결의문

1998년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일본 5개국의 운동관련 단체 참석자들은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이라는 주제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는 명백한 여성인권 침해의 문제이며 국가에 의한 전쟁범죄임을 새삼 확인했다. 이것은 금전적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늘날 여전히 전쟁상황중에서 여성에게 가해지고 있는 국가폭력의 극단적인 형태였으며, 세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조직적인 성노예였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은 세계 여성인권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는 사실을 아시아 여성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수년간 아시아의 '위안부'피해자의 대부분과 여성, 시민단체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반대하여 왔다. 이제 우리는 대만정부가 1997년 12월에, 그리고 한국정부가 1998년 4월에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운동의 성과를 서로 확인했다.

1.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발굴을 통해 50여년간 묻혀있던 군 위안부 제도가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냈다.
2. 오랜동안 고난과 치욕의 세월을 보냈던 피해자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시켰다.
3. 한국과 대만에서는 정부를 움직여 피해자 지원금을 확보하고, 한국은 전범의 입국금지 조치를 끌어내는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4.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의 국제활동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라는 관점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5.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와 아시아 각국의 시민단체들은 서로 연대하여 일본정부의 국민기금 지급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이러한 그동안의 운동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쟁관의 변화, 식민지 청산문제, 성차별 문제, 민족차별 문제 등 해결되지 못한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제 아시아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공동의 운동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연대하며

다음의 공동과제를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1. 일본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2.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운동을 전개한다.
 - 1)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범죄자 명단을 발굴한다.
 - 2) 아시아의 피해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일본 전범의 출입국 금지법안을 만들도록 촉구한다.
 - 3)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촉구한다.
 - 4) 2000년에 개최가 제안되었던 '위안부'에 대한 여성전범법정에 협력한다.
 - 5)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다.
3.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정부가 국가배상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한다.
4.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이와같은 결의하에 피해자와 우리 운동 단체들은 아시아 연대를 더욱 강화해서 21세기를 맞이함에 있어 새로운 결의로 인권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높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이다.

1998년 4월 17일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참가자 일동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기자회견

일시 : 1998년 4월 17일 오후 12시
기자회견 : 각국 대표

▶ 질문 : 결의문 중 두 번째 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000년 여성 재판소 설치의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가?

▶ 답변 : 전쟁으로 인한 여성의 피해는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진상규명을 해나갈 것이다. 일본정부가 저지른 여성에 대한 범죄가 왜 처벌받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그것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일본의 '위안부' 관련자료들을 공동으로 수집해 나갈 것이다. 20세기는 여성에 대한 범죄가 많았다. 또한 이에 대한 여성의 투쟁도 많았다. 2천년 마지막 달, 인권의 날에 여성 재판소를 설치하는 의미는 특별하다. 여기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만이 아니라 그외의 문제까지 다루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를 왜 전범으로서 인정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누가 가해자인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법정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처벌할 것이다.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향한 투쟁이 출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성전범 재판소를 제안하여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았다.

▶ 질문 : 일본정부 차원의 배상을 묻지 않겠다고 한 국정부 입장이 정해졌는데, 결의문 3항을 보면 정대협의 입장이 정부와 대치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 답변 : 지원금 지급에 즈음한 외무부 성명문에는 일본정부에 대해 우리정부가 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대협은 여러 통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본의 배상과 지원금은 따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중에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문제에 대해 언

급했다. "배상과 지원금은 별도의 문제다. 정부의 지급, 또 일본의 배상금 지급까지 다 지급하는 방안은 어떻게 될지"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대협은 이 문제에 대해 외무부 장관과 면담을 해서 "일본정부에 배상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문장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정대협은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 질문 : 문제항을 삭제하라는 선에서 요구를 멈추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 아닌가? 일본 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유엔의 권고사항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또 하나, 여성전범 재판소의 성격을 분명해 해달라. 국제형사재판소가 열린다면, 굳이 여성 재판소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진상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 : 정대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결의한 2000년 여성전범 재판소는 진상규명을 위해 각 나라에서 전범자 명단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제까지 형사재판이 남성중심적이었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전범을 처벌하는 것이 바로 여성 재판소의 의의이다.

▶ 보충발언 :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해 6월 로마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각국에서 아직 동의하지 않는 사항들이 많다. 사건을 접수받는 것은 5년 정도 걸릴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사안에 대해서만 접수받게 되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포함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차원의 여성 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

▶ 보충발언 :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은 하나의 문제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 나라에서

조사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조사활동을 공동 출판물의 형태로 발간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의 피해자 조사도 연대활동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 보충발언 : 여성전범 법정을 위해, 전범자들의 출입국 금지와 책임자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범리스트는 각국에서 작성하도록 촉구해야 하고, 누가 책임자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책임자 처벌에 대한 촉구가 약했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천황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취급하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 보충발언 : 여성전범 법정에 제출될 기록은 정대협이 준비하고 있는 '여성과 전쟁' 사료관의 형태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할 것이다.

▶ 질문 : 책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가?

▶ 답변 : 법적인 책임자를 밝히는 것은 법률가의 문제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다면, 일반군인까지 포함하기 보다는 '위안부' 제도를 제정하고 명령한 경영자가 주요 범위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망했다. 그러나 진상규명 차원에서 중요하다.



아시아연대회의의 도쿄보고회 (개회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도쿄 보고집회를 열면서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신데 대해 우리 정대협과 한국 할머니들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대로 한국 정대협은 지난 4월 15-17일 까지 서울에서 5개국,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한국 그리고 일본(북한은 초청했으나 불참)이 모여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가졌습니다. 약 150명의 참가자는 각 단체 대표들로서 단체 수는 77개 단체에 이르러서 성과있는 모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임을 우리가 다시 일본 도쿄까지 연장하여 보고회를 가지는 의미는, 바로 일본정부에게 더 가까이에서 더 분명하게 촉구하려는 의도였고, 또한 더 많은 일본인 여러분에게 이 모임의 결과를 알림으로서 이 운동의 확산을 생각 해서였습니다.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는 그 주제가 말하듯이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한 구체적 운동의 대안들을 모색하여 힘을 합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던 회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대회의의 주된 주제는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입니다.

연대회의를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한국정부는 정대협의 제안을 받아들여 어려운 경제난국임에도 불구하고 49억원의 '지원금'을 '위안부'할머니들에게 나눠 주기로 정책을 결정했고 4월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견 조정을 하다가 다음 21일 국무회의로 최종결정을 보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조정 내용도 바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국가배상을 정부지원금과 어떻게 관련짓는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국정운영,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치를 내걸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으로 국무회의 내용이 공개되었고, 그중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지원금과 일본정부의 배상은 별

도의 문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무리없이 대통령의 정책대로 결정이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결정은 아시아연대회의의 참석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환영 받았고 그 자리에서 특히 다른 피해국 정부들에게도 우리의 요구를 표시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과의 협력에서도 우리가 절실히 인식되었듯이 더 이상 문제해결은 물질적 처리로만 해결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할머니들이 원하는 바로 '명예회복과 공적인 사죄와 법적책임, 즉 국가배상'이라는 차원이 최종해결책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들의 운동의 성과를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첫째로 꼽힌 성과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료의 발굴을 통해 50여년간 묻혀져있던 일본군 위안부제도가 역사적 사실임을 밝혀낸 성과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안부'제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현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윤정옥 선생님을 비롯한 운동가와 연구가들의 노력으로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시작되면서 위안부제도라는 구조적 폭력의 전체상이 부각되기 시작했던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오랜동안 고난과 치욕의 세월을 보냈던 피해자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들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회복시켰던 성과입니다. 1990년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한가운데로 피해자들을 주제로 형성"(上野) 하였고, 이것은 나아가서 다른 할머니들, 그리고 다른나라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의 사회통념을 깨고 자기들이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정부가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인식의 역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참석자는 나눔의 집에 살고 계시는 김순덕 할머니의 얼굴표정의 변화를 예로 들면서 실감나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성과는 대만과 한국에서 자신의 정부에서 '국민기금'에 대항하는 피해자 지원금을 확보해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특히 전범의 입국금지조치를 국회에서 통과시킨 성과가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나까소네 전 일본 수상이 초청되어 정대협은 대대적으로 항의시위도 하고 항의문을 법무성에 보냈습니다만, 아직도 후속조치로 그 명단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미국정부는 현재 32명의 전범에게 입국금지조치를 하고있고, 캐나다 정부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네째로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활동을 통하여 '위안부'문제가 여성에 대한 전쟁범죄라는 관점을 범세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데 기여했던 성과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분쟁지역에서의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위안부'제도의 뿌리에 있는 성차별주의, 제국주의, 민족차별주의의 오늘날의 현존에 대해 많은 공감과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성과로는 '국민기금'에 대응한 반대운동을 위해서 피해국 운동은 비교적 서로 연대를 강화하며 잘 운영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금'측이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이용하여 한국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냈을 때, 대만, 필리핀, 정대협, 일본의 운동단체들은 연대하여 반대의견 광고를 즉시 게재했던 일은 참으로 긴밀한 동지적 연대였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민기금'은 그 부도덕성과 반피해자중심적 사고들과 행태, 피해국 정부들의 지원금 지급이라는 요인들로 하여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급선회하여 한단계 나아가서 일본정부의 공식사죄와 국

가배상,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받아내서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성취시키는 일로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은 운동들을 연대하며 전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함께 하는 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구체적인 다양한 노력들을 실천해가는 일, 일본정부가 배상을 피해 만든 '국민기금'의 해산을 요구하는 일, 일본이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실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일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의를 하고 각 단체대표들은 헤어졌습니다. 몇몇만이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보고하기 위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회의에서 토의되었던 내용, 감격했던 내용, 분격했던 내용, 울고 웃었던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내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정어린 관심으로 우리들의 보고를 들어주시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여성의 인권을 위한 운동의 대열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도쿄 보고회 일정

1. 기자회견

- 때 : 1998년 4월 20일 오후 4시
- 곳 : 참의원 회관
- 사회 : 스텝끼 유우꼬
- 보고 : 각국 대표들 (한국, 대만, 필리핀)

2. 아시아연대회의의 보고집회

- 때 : 1998년 4월 20일 오후 7시~ 9시
- 곳 : 도쿄 우먼스 플라자
- 주최 : 정대협

· 지원단체 : ▶ 찬동단체 :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여성연합회, 부인민주클럽, 여성과 인권 구니다치 시민의회, 말라야 로라즈와 함께 일본군의 성폭력을 묻는 회, 리드레스국제캠페인98,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 위안부문제에 입법해결을 요구하는회, 제일의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회, 일본기독교회 '종군위안부문제와 연대하는 회, 할머니와 함께, 조각보,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회, 필리핀인 전위안부와 함께 루나스, 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 일본기독교교도교구 성차별문제 특설위원회, 나고야 '구일본군에 의한 성적 피해자여성을 지원하는 회, 태국 아동매춘피해자의 갱생과 매춘예방을 촉진하는 회, 재일대한기독교관서지방교회여성연합회, 재일한국민주여성회, 도라지회, 피스보트, 일본기독교단성차별문제 특별위원회, 구치기아시아여성의 회, 일본전쟁책임자료센터 (23단체)

▶ 찬동개인 : 미야니시 이즈미, 오다기리 도구고오, 양영지, 주수자, 미다게 가즈고, 다카시 로다카, 미우라 하루고, 가와다 후미고, 아리미즈 겐, 오시마 고평이치, 오조노 고평이치, 요시다 다카시, 김영희, 기노무라 데루미, 스텝끼 유우꼬, 다케다 데루요, 스텝끼 히로고, 후구다 유우, 오고시 아이고, 시미즈 기요고, 니시노 루

미고, 요시다 맘지고, 아마노 가즈고, 다카하시 기구에, 오카무라 미치고, 마즈이 야요리, 가사하라 요오고, 엔야 교오고, 아마구치 아키고 (29명)

· 집회참석자: 약 120명

· 프로그램:

- * 주최자 인사: 김윤옥(정대협 공동대표)
- * 한국측 보고: 지은희(정대협 기획위원장)
- * 대만측 보고: 王滿峰(대만 부녀구원기금회 이사)
- * 필리핀 보고: 넬리아산초(리라 필리피나 공동대표)
- * 결의문 소개: 스텝끼 유우꼬 (여성전쟁인권학회)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의 참가자

1. 한국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1 강인성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 사서함 316	053-353-1597
2 강혜숙	충북 여성민우회	충북 청원군 남석면 귀례리 163	0431-57-2705
3 고애신	예장전국여교역자회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아파트 520-107	02-925-5484
4 고은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서대문구 북아현1동 129-34 한성아파트 307호	02-312-5823
5 고혜정	한국 정신대연구소 (정대협 실행위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23-4	0344-904-3552
6 권기록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 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39-28	015-716-5261
7 권미경	기독교여민회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주공아파트107-204	02-265-7957
8 권정자	한국여교역자회	대전시 동구 평동 570-22	042-273-3536
9 긴조 이쿠코	정대협 자원봉사자	서대문구 연희동 194-8 302호	02-3142-9038
10 김경애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광진구 구의3동 현대프라임 아파트 6-1001	02-3437-7231
11 김기홍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 광역시 남구 대면 10동 1601-4	053-0621-1759
12 김낙경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강북구 수유1동 475-42	02-708-4181
13 김대실	영화제작인	BUMBLE BEE PRODUCTIONS 1752 17th st. N.W. WASHINGTON.DC.20069	914-255-2908
14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정대협 실행위원)	종로구 견지동 39-1 상운중심 2층	02-738-5581
15 김선실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용산구 용산동 2가 1-1140	02-319-1368
16 김성옥	정대협 자원봉사자	한양대학교 철학과 3학년	
17 김수향	한국 정신대연구소	서대문구 대신동93 명하우스 101호	02-362-3711
18 김신실	정대협 실행위원	서대문구 충정로2가 기사연빌딩 101호	02-613-0222
19 김영애	새정치 국민회의	성북구 장위 1동 232-44	02-784-6314
20 김윤심	피해자 할머니		
21 김윤옥	정대협 공동대표	양천구 목동아파트 1326-104	02-653-6571
22 김진선	개인참가자	경북 구미시 원평3동 7-99	0546-53-3404
23 김혜순	청와대대통령비서실	서초구 방배동 궁전B-508	02-770-0212
24 김효정	개인참가자	마포구 동교동 204-7	02-324-0655
25 다바타 가야	정대협 자원봉사자	서초구 방배동 178-40	02-597-0438

이름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26 박경미	한국 정신대연구소	은평구 용암동 100-52	02-355-9118
27 박금해	여성한국사학회연구소	성남 분당구 정자동200 정은마을102-402	0342-711-6229
28 박순덕	개인참가자	포항시 창포동 주공아파트 106-1108	0562-49-2473
29 박현숙	개인참가자	경북 경산시 중방2동 광명아파트 5-111	053-814-2682
30 배정민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 광역시 서구 평리3동 1077-21	053-558-1769
31 성명옥	여신학자협의회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파트 732-302	02-275-7754
32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정대협실행위원)	양천구 신정2동 현대아파트 102-802	02-365-4016
33 심미자	피해자 할머니		
34 안상임	아시아여성신학 교육원	종로구 원서동 92	02-764-5036
35 양쾌전	한문화연구소	종로구 부암동 353-1	02-395-7052
36 양미강	정대협 총무	서대문구 충정로 2가 기사연빌딩 101호	02-813-7875
37 엄영섭	강제연행생존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사동 한라아파트 115-1214	032-325-5417
38 여순주	한국 정신대연구소	인천 광역시 남구 송의4동 8-144 4/5	032-868-2652
39 오근남	아시아여성신학 교육원	장충 1동 38-84 평화의집 4층	02-268-2482
40 오재식	선명회		02-744-3964
41 윤동순	개인참가자	송파구 송파동 한양아파트 31-1106	02-203-2804
42 윤영자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은평구 갈현동 326-42	02-3668-4612
43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서대문구 대신동 131	02-393-1215
44 윤혜경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협의회	종로구 연지동 136-46 기독교회관 604호	02-763-9612
45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내 8층	02-720-2251
46 이강재	WIN KOREA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 110-1305	02-3452-8417
47 이경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종로구연지동 136-56 기독교연합회관11층	02-708-4181
48 이경실	감리교 목사 (정대협 실행위원)	동대문구 제기동 137-41	02-923-0625
49 이문숙	한국기독교교회협회	경기 고양시 성사동 임창아파트 2-305	02-745-4943
50 이미경	국회의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105호	02-788-2014

이름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51 이병희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중랑구 묵동 신내 두산아파트 516-502	02-3421-9898
52 이상덕	여성특별위원회	종로구 세종로 82-1 문화관광부 내 8층	02-720-2265
53 이성순	정대협 자원봉사자	강남구 역삼2동 729-29	02-568-4293
54 이영섭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 광역시 동구 신천 4동 487 보성아파트 1-398	053-754-4793
55 이용수	피해자 할머니		
56 이우정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4층	02-275-4860
57 이윤경	통역자		02-499-2873
58 이정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서초구 반포2동 신반포아파트 12-304	02-3668-4612
59 이정은	정대협 자원봉사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학년	
60 이종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구 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34 지산 2단지 201동 1205	012-753-9472
61 이지영	정대협 자원봉사자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5차 APT 117-1109	02-537-3676
62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경북진해시 석동 상지역수아파트 601호	0553-545-3489
63 임우선	정대협 간사	강동구 성내3동 405-33	015-8410-9278
64 임지영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은평구 갈현 2동 326-42	02-359-9993
65 전현경	정대협 자원봉사자	강북구 수유6동 553-1 극동아파트101-101	02-991-7000
66 정숙자	여성교회 (정대협 실행위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3-1109	02-3453-7050
67 정진성	한국 정신대연구소 (정대협 실행위원)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13-505	02-504-7161
68 조미리	교회여성연합회 (정대협 실행위원)	종로구 연지동 136-56 기독교회관 1110호	02-708-4181
69 조민아	정대협 간사	동작구 사당3동 169-8 대림아파트 5-1104	02-365-4016
70 조여권	IF (사진작가)	종로구 인사동 153-3 KJ빌딩 207호	02-725-4172
71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02-273-9535
72 조영희	동덕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영등포구 신길7동 1694번지 3/7	02-940-4254
73 조유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중구 광희동 2가 303-48	02-269-2962
74 조윤희	여성교회	용산구 후암동 141-12	02-266-1850
75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대협 실행위원)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2층	02-273-9535

이름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76 지현주	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여성들의 모임	경기 군포시 당동 886 주공아파트 350-2102	0343-399-2111
77 최순자	감리교여교역자협의회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동산리 271	02-792-9629
78 한국염	아시아여성신학연구소 (정대협 실행위원)	종로구 창신2동 130-102	02-744-0451
79 한영애	국회의원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536호실	02-788-2522
80 황금주	피해자 할머니		
81 혜진	나눔의 집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65	0347-768-0064
82 호리치에코	개인참가자	성북구 종암 1동 54-398	02-926-8158
83 홍옥주	개인참가자	서초구 서초동 1519-5	02-3472-7844
84 Cristina Dejan	WomensCenter For Migrant Worker	장충 1동 38-84 평화의집 4층	0346-593-9534
85 Dolor	정대협 자원봉사자	장충 1동 38-84 평화의집 4층	0346-593-9534
86 윤수연	정대협 자원봉사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4학년	

그외참가자들

* 기자 : 연합통신 윤근형, 여성신문 최진숙, 한국일보 노향란, 기독교신문 조영석, 동아일보 윤경아
기독교신문 유은진

* 도움주신 이 : 사진 조여권, 비디오 보임, 문화의 밤 강혜숙,
한국여성불교연합회 합창단, 임지영

* 통역사 : 이윤경 이대훈 반성인 서혜영 아르미즈 켄

2. 필리핀 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1 Susan Macabuag	Malaya Lolos Philippines	P.O. Box AC 662 Cubao 1135, Quezon City Philippines	632-928-4973
2 Richelda A. Extremadura	Lila Pilipina	35 Scout Delgado, Roxas District Quezon City 1103, Philippines	632-928-8034

3. 대만 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1 王清峰	台北市婦女救援基金會	台灣台北市大安路一段83-8-3	02-2711-9128
2 何碧珍	台北市婦女救援基金會	台灣台北市復興路一段321	02-2700-9595

4. 인도네시아 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주소	연락처
1 Paulus R. Mahulette	LBH Jakarta Jakarta Legal Aid Institute	LBH Jakarta JL.Diponegoro No.74 Jakarta 10320,Indonesia	021-390-4266

5. 일본 참가자

第5回アジア連帯会議 日本からの参加者名簿一覧

NO	名前	電話番号	ファックス番号	所属団体名	電話番号
1	有光健	03-3262-4971		戦後補償実現市民基金	03-3262-4971
2	石井美登里	0947-45-9997	同左	戦後責任を問う「開釜裁判」を支援する会	092-713-1879
3	市場恵子	086-277-7522	同左	「慰安婦」問題を考える女たちの会	
4	伊藤雅子			〈女と人権〉くにたち市民の会	
5	伊藤雅子	03-3754-6378	同左	タイ児童買春被害者の更正と買春予防を促進する会	03-3754-6378
6	榎本愛美	075-871-4768	075-861-2573	日本基督教京都教区性差別問題特設委員会	075-451-3556
7	大越愛子	06-876-7378		「女性・戦争・人権」学会	06-721-2332
8	大島孝一	047-353-6585	同左	戦後補償実現市民基金	03-3262-4971
9	天下幸恵	0284-42-6673	0284-42-8841	日本基督教団性差別問題特別委員会	03-3202-0541
10	岡村美知子	03-5997-3940	同左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0422-41-0251
11	小野田美紗子	047-389-8880	同左	ナムの家記念館後援会東京事務局	047-389-8880
12	笠原洋子	042-576-7823	同左	〈女と人権〉くにたち市民の会、	
13	加藤喜代美	086-955-7282	同左	慰安婦問題を考える女たちの会	
14	北沢杏子	03-3708-7321	03-3708-7324	性を語る会	03-3708-7326
15	キム・スジャ(金寿子)	03-3887-4686		在日韓国民民主女性会	
16	キム・ヨン(金英姫)	0422-46-8590	0422-48-4015	戦後補償実現市民基金	03-3262-4971
17	金城育子	82-2-3142-9038		挺対協ボランティア	
18	小林早智子	048-481-2568	同左	日本キリスト教協議会女性委員会	03-3203-0372
19	小林美和子	042-576-2947		〈女と人権〉くにたち市民の会	
20	紫洋子	03-5540-5513	同左	「戦争と女性」に対する暴力ネットワーク	
21	鳥沢二三子			性を語る会	03-3708-7326
22	志水紀代子	0726-92-0727	同左	「女性・戦争・人権」学会	06-721-2332
23	清水政夫	03-3550-6024	同左	ききょうの会	
24	鈴木弘子	03-3977-5517	同左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0422-41-0251
25	鈴木裕子	03-3617-3544	同左	「女性・戦争・人権」学会	
26	高橋喜久江	03-3367-2360	同左	日本キリスト教婦人矯風会	03-3361-0934

第5回アジア連帯会議 日本からの参加者名簿一覧

NO	名前	電話番号	ファックス番号	所属団体名	電話番号
27	高島たつ江	0427-20-8737	同左	カトリック東京教区正義と平和委員会	0424-91-0104
28	武田てるよ	042-576-5905	同左	〈女と人権〉くにたち市民の会	
29	谷元絢子	0849-34-1546	同左	日本軍「慰安婦」問題を考える会・福山	0849-24-4435
30	田端かや	82-2-597-0438	同左	挺対協ボランティア	
31	チ・ヒョンジュ(池賢珠)	82-343-399-2111	同左	挺対協ボランティア、「慰安婦」問題を考える女たちの会	
32	チョ・イホ(菅戸)	06-726-4545	同左	在日大韓基督教関西地方教会女性連合会	06-731-3939
33	西野瑠美子	0426-67-9634	同左	「戦争と女性」に対する暴力「ネットワーク	
34	根本敦子	042-576-4140	同左	在日の慰安婦裁判を支える会	0422-41-0251
35	野平晋作	03-3363-7561	03-3363-7562	ピースボート	03-3363-7561
36	信川美津子	0489-24-2655	0489-24-2655	ハルモニと共に・チョゴッポ	
37	ハク・ユンジャ(朴裕子)			旧日本軍による性的被害者を支援する会	
38	原田恵子	06-946-7008	06-945-9212	フィリピン人元「慰安婦」と共にLUNAS	06-946-7008
39	ハン・ジョン(方清子)	06-741-6032	同左	在日韓国民民主女性会	
40	広瀬貴子	0776-54-0536	同左	ナムの家記念館東京事務局	047-389-8880
41	福田ユウ	0282-23-0772	同左	日本キリスト教会「従軍慰安婦」問題と取り組む会	0286-22-1043
42	藤田えり子	086-273-6880	086-273-7271	慰安婦問題を考える女たちの会	
43	堀江節子	0764-25-1745	0764-25-1702	めんどうり会議・富山	
44	堀子穂子	03-3776-8026		戦争を許さない女たちのJR連絡会	03-3491-7191
45	松井耶衣	03-3412-2775	03-3412-2765	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	03-3780-5245
46	松岡澄子	092-713-0628	同左	戦後責任を問う「開釜裁判」を支援する会	092-713-1879
47	三宅和子	03-3300-1785	同左	日本キリスト教会「従軍慰安婦」問題と取り組む会	0286-22-1043
48	山口明子	03-3686-1954	同左	日本基督教協議会	03-3203-0372
49	山野和子	023-643-7072	同左	ロラ基金山形グループ	
50	ヤン・ヨン(梁雲芝)	03-3895-5388		在日全国教会女性連合会	
51	横田悦子	086-293-2900	同左	「慰安婦」問題を考える女たちの会	
52	吉田真智子	023-623-8552	同左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후원해주신 분들

국내 후원

- * 김대실 (재미교포/영화제작인) 103,500원
- * 김원동 장로 1,000,000원
- * 권기식 (<주>대화광고 사장) 500,000원
- * 권영자 (국회의원) 100,000원
- * 김 향 (번역 자원봉사자) 250,000원
- * 서지에 (번역 자원봉사자) 250,000원
- * 서혜영 (통역) 100,000원
- *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1,000,000원
- * 윤후정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3,000,000원
- *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100,000원
- * 이미경 (국회의원) 100,000원
- * 이우재 (국회의원) 100,000원
- *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200,000원
- * 이희호 여사 1,000,000원
- * 조원영 (동덕여대 총장) 200,000원
- * 최종윤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2,000,000원
- * 한영애 (국회의원) 1,000,000원

국외 후원

- * 권옥화 1,000,000원
- * '전쟁과 군 문제연구회' 1,020,790원
- * '여성과 인권 구니다치 시민의 회' 2,047,580원과 330,000엔
- * 구 일본에 의한 성적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회 521,500원
- * 전후보상실현시민기금(ICR) 1,506,600원
- * 제2회 아시아연대회의 실행위원회 300,000엔
- * 용서하지마! '국민기금' 긴급국제집회 참동자들 213,100엔
- * 마리아 로라즈와 함께 일본군의 성폭력을 묻는 회 50,000엔
- * '여성전쟁인권'학회 150,000엔

참가자들의 소감

국내 참가자들

- * 각국에서 오신 분들이 진행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할머니의 증언이나 말씀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 * 발제시간 배분이 균형있게 이뤄지지 못했다.
 - * 한국측 참가자가 부진한 것은 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 일정, 숙박, 회비, 식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 * 분과별 토의와 발표가 효과적이었고 재미있었다.
 - * 참여단체들의 소식지와 자료들을 전시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 * 토론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 * 정신대 문제해결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원칙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일본단체들의 자세를 보면서 그들에게 이 운동의 의미가 작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아시아 여러 단체들간의 연대와 국제활동의 필요성을 생생한 현장을 보면서 생생히 느꼈다.
 - * 일본과 한국의 당사자의 중요성 때문인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의 내용에 대한 큰 주목이 없었던 듯 하다.
 - * 아직 학생이다. 정신대의 국제적 중요도와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 * 이번 대회에 참가해서 이제까지의 정대협이 추진해왔던 일들과 현재 정신대문제가 어디까지 추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외국참가자들

- * 총괄토론 시간이 좀 더 충분히 있었으면 한다.
- * 그룹토의, 발표가 흥미있었다.
- * 일본측의 운동 전체의 停滯, 방향성, 전망부족이 드러나는 회의였다. 가해국 시민단체의 운동의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국내에서 다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 * 배려가 담겨진 식사와 숙박의 준비에 감사한다. 회비도

- 적당한 금액이었다. 일정에 대해서는 수요데모에 참가하게 되어서 좋았지만, 토·일요일이 포함되면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 구체적인 결의가 된 것은 잘되었다. 결의문은 중요한 것이므로 전원에게 바른 문장으로 된 것을 나누어줘야 할 것이다.
- * 한명 한명 발표 후,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 * 한국의 정대협 운동의 구체적인 보고에 정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 이후, 운동의 방향은 보다 장기적인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연대회의 준비도 조금 시간을 두어 여성 국제법정과도 관련시키면서 개최하면 어떨까?
- * 회의에 있어서 3개 국어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 * 발표내용이 지금까지의 운동의 성과와 다음의 행동계획 등이 들어 있어서 일본에 돌아가 설명하기가 쉬워서 좋다.
- * 일본 국내에도 많은 단체가 있으므로 결집한 큰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 * 시간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충실된 내용이었기에 감사한다. 그룹토의에서 좀 더 본격적인 문제가 토론되었으면 한다.
- * 매년 기획되었으면 좋겠고, 각국으로 좀 더 빨리 알려주었으면 한다.
- * 실행위원 모든 분들이 수고했다. 특히 수요데모에 참가할 수 있어서 기뻐다.
- * 한국의 보고서에 감격했다.
- * 좋은 프로그램을 짜신 주최측 분들에게 감사한다.
- * 정대협의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사한다.
- * 중요한 테마를 간결히 보고, 정보교환 할 자리가 제공되어 좋았다. 정말로 중요한 테마이므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 * 책임자 처벌에 대하여 좀 더 이야기 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 전체의 승리는 무척 먼 것 같지만, 한걸음 한걸음의 축적을 도모해야겠다.

정대협 활동일지(97.1-98.6)

(1997년)

- 1.7 수요일 5주년 성명서
- 1.11 일본의 국민기금 한국의 피해자들 7명에게 위로금 200만엔과 의료복지금 300만엔 목록과 하시모토 총리의 사과편지 전달
- 1.13 1.11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일본대사관 항의방문
- 1.16 정대협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Peacenet 협조)
- 2.1 롯데백화점 앞에서 거리서명전
- 2.2 강덕경 할머니 사망(서울중앙병원)
- 2.4 강덕경 할머니 장례식(일본대사관 앞에서 노제)
- 2.3-6 입법해결을 위한 일본방문(윤정옥, 지은희, 장완익, 이미경, 이부영, 안상수, 김성수, 이희자)
- 2.12 할머니들 국민기금 반대하는 서명, 편지 외무부 전달(김윤심, 김복선, 심미자, 이용수 할머니)
- 2.27 '일본 전범 입국금지 우리도 하자!' 세미나 개최
- 3.1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정신대 할머니 온겨레 돕기' 모금공연(사회: 홍순관, 오숙희)
- 3.5-9 북아일랜드에서 열린 "여성, 남성 그리고 전쟁" 세미나 참석, 증언(윤정옥, 손희주, 김윤심 할머니)
- 3.21 강덕경 할머니 49제
- 3.25 시민연대 모금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 3.30-4.6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신혜수)
- 4.9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위안부'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 노총, 경총에 공문
- 4.11 극단 '城' 14주년 기념공연 '도라지' 개막식 참가
정학수, 정재수, 이금순 중국할머니 영주귀국 예배
- 4.12 해모수 치과 무료진료
- 4.21 정신대 자료집 6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활동" 발간
영문소식지 97년 4월호 발간
- 4.21-25 일본 국민기금 반대를 위해 아시아 연대차원 대응책 마련을 위해 대만방문(윤정옥, 장완익)
- 4.30 법무부에 일본 국민기금 측 우스끼 게이코의 출입국 금지요청 공문
- 5.8 '대지의 눈물' 공연팀 주관으로 교회와 할머니 결연모임
- 5.28 시민연대 해산식
- 5.30 윤미향 총무 사임
- 6.16-18 노후복지개발원 초청 할머니 제주도 여행
- 6.23 일본 국민기금 수령 피해자 7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정대협을 소송

- 6.30 일 문부성 '위안부' 문제 서술 교과서 삭제 관련 항의성명
- 7.1 김윤옥 공동대표 취임
- 7.9 일본 오카야마 시의원 방문, 피해자 증언과 강연(김윤심 할머니, 김신실)
- 7.11 정대협 외무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
- 7.18 하시모토 총리와 국민기금 이사장 하라 봄삐이 앞으로 국민기금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발송(김윤심, 정서운 할머니)
- 7.23-28 일본 오카야마 집회 참석(지은희, 문필기 할머니)
- 7.26-28 일본 '용서못한다 국민기금' 집회 참석(윤정옥, 김윤옥)
- 7.29 일본 국민기금과의 토론회 무산
- 8.3 제277차 수요일 위 및 8.15기념 행사
- 8.8-9 정신대할머니 돕기 소장품 판매
- 8.10-15 유엔 인권소위원회 참석(신혜수, 손희주, 김상희 할머니), 영어 비디오 제작
- 8.15 MBC, 정신대할머니 이야기 생방송
- 8.25 '정신대할머니 지키기 2차모금' 협조공문을 각 시도 발송
- 8.28-31 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모금 집회 참석(김신실, 이용수 할머니, 김분선 할머니)
- 9.5 명동 상업은행 앞에서 거리모금전
- 9.12 국민기금 반대 스티커 제작, 배부
- 9.25 정대협 소송사건으로 인해 지방검찰청 출두(윤미향, 윤미정)
- 10.8 수요일 위시 일본 국민기금 수령의사를 표명한 할머니 6분 참석하여 국민기금 반대 입장 표명
- 10.22 서울중앙병원 무료진료팀 진료
- 11.6 일본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 국제회의 참석(윤정옥, 신혜수)
- 11.18 정대협 7주년 입장 표명
- 11.25 양미강 총무 취임
- 12.3-5 후쿠오카 쓰구시 대학 교직원 조합 초청 강연(지은희, 황금주 할머니)
- 12.5 모금을 위해 국무총리, 외무장관 협조공문 발송
- 12.11 홍순관 '대지의 눈물' 100회 기념공연(창천교회)
- 12.16 최초의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 사망(이대부속병원)
- 12.18 김학순 할머니 장례식(천안 방향의 동산)
- 12.22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모금 협조공문 발송

<1998년>

- 1.8 '정신대할머니 지키기 2차 모금'에 관한 할머니 모임 개최
- 1.23-25 일본 김학순 할머니 추모집회와 전후보상 포럼 참석(고혜정, 김신실)
- 1.26-28 일본에서 유엔인권위원회 고등판무관 Mary Robinson 면담(신혜수, 양미강)
- 2.18 제300차 수요시위(일본대사관과 파고다공원 앞)
- 2.24 전범 나카소네 일본 수상 방한 반대 시위
- 3.2-6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석(신혜수)
- 3.3 한글소식지 12호 발간
- 4.5 영문소식지 98년 4월호 발간
- 4.6-10 제54차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신혜수, 양미강)
- 4.15-17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5개국 150명 참석, 서울 한강호텔)
- 4.20-22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동경보고집회 및 '위안부' 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국제포럼(지 은희, 김윤옥)
- 4.21 한국정부, 피해자 개인에게 지원금 3800만원(정대협 모금 포함)지급 결정
정대협, 기자회견시 한국정부의 입장(일본정부에게 먼저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발표
- 4.27 일본 시모노세끼 재판부 위안부 3명에게 일본정부 배상책임 인정 판결
- 5.7 한국정부,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
정대협, '정신대할머니 지키기 2차모금' 1인당 410만8천원 지급
- 6.1-6 국제노동기구 총회 참석(정진성, 손희주)
미 워싱턴 정대위 초청 강연(신혜수, 김복동 할머니)
- 6.6-7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준비회의 참석 및 강연(윤정옥, 지은희)
- 6.15 한글소식지 13호 발간
- 6.18-19 할머니 모임(대전 유성온천)
- 6.27 시모노세끼 재판 평석회 개최
정대협 자료집 9권, "이제, 일본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 한글판) 발간
정대협 자료집 10권, "시모노세끼 재판 평석회"(한글판, 일어판) 발간

정신대 자료집 9
제5차일본군'위안부'문제아시아연대회의보고서
"이제, 일본 정부의 배상으로 해결을"

펴 낸 날 1998. 6. 27
 펴 낸 곳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 소 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101호
 전 화 365-4016 392-5252
 팩 스 365-4017
 홈페이지 <http://witness.peacenet.or.kr>
 E-mail mss@peacenet.or.kr